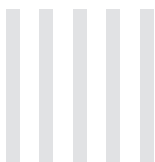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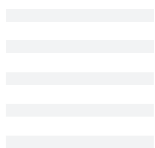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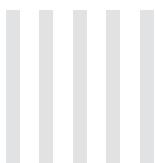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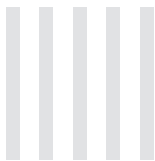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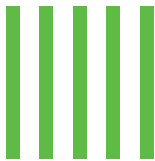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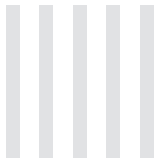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제5편

목포의 사회



제1절 목포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성장

김종익 |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제2절 목포 시민운동의 영역과 역할

김종익 |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제1장 목포의 시민운동

제1절 목포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성장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되는 격변의 과정에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 개혁의 중요한 주체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시민사회에 바탕을 두고 성장해 온 시민운동은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그릇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권력의 횡포에 맞서 사회개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요구들을 조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했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시민운동이 활발해졌고, 점차 지역 협치, 곧 지역 거버넌스의 큰 축으로 자리잡아갔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현안을 둘러싼 공론화와 여론 형성, 정부와 기업 감시, 사회적 약자 옹호 및 지원,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촉구와 서비스 제공, 시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운동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는 공공적인 목적을 지향하면서 국가 및 기업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자발적 집단 또는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나 여론 등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과는 다른 영역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집합체로서 존재하고, 동원이 아니라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영역이며,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추구하며, 활동 영역이나 활동 방식도 조직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민운동이 성장하려면 시민운동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가 성장해야 하고, 시민사회의 문화가 성숙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목포 지역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상당하게 기여해왔지만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 문화의 한계로 인해 지속성이나 확장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시민운동의 성장도

제약받았다. 시민운동을 뒷받침하는 자원봉사문화, 기부문화, 토론문화의 성숙도를 살펴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⁰¹⁾

2003년 목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원봉사, 기부, 토론문화의 성숙도를 보면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36.4점이고, 자원봉사문화 47.3점, 기부문화 38.5점, 토론문화 35.6점으로 각각 나타났다.⁰²⁾ 같은 조사기관에서 2006년에 실시한 기부와 모금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불과 23%이고,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77%로 나타남으로써 목포 기부문화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포 시민들에게 시민단체들이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설문조사에서 목포 시민들은 사회 문제에 관해 판단을 할 때 언론, 가족·친척, 지인, 동네 사람 등의 순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시민단체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해서 이익단체 2.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시민단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1.9%로 나타남으로써 시민단체를 접촉한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민의 권리 의식에 기초한 요구 운동인 시민운동은 특정한 이념이나 노선, 행동 등을 주창하는 애드보커시(advocacy) 운동 단체들과 지역 사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활동하는 단체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활동을 하는 단체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목포 지역의 상당수 시민운동단체들은 애드보커시 운동 조직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경실련, 목포포럼, 목포문화연대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 목포YMCA와 목포YWCA는 애드보커시 운동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로서 194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하는 종합적인 시민단체로는 목포YMCA와 목포YWCA, 목포포럼, 목포경실련,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 시민연대, 목포KYC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전국 조직에 소속된 지역 조직으로 지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01) 목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지역 사회 인식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003년과 2006년에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목포, 목포사람들』 1, 2권에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2003년 설문은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목포시 거주자 812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 직접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5\%$ 포인트이다. 2006년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8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신뢰수준도 같다.

02) 설문지에는 0~10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0~3은 미성숙, 4~6은 보통, 7~10은 성숙이라고 구분하고, 이를 100점 만점 대비 점수로 환산한 결과이다.

문화된 운동 단체로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소비자연맹, 목포문화연대 등의 활동이 지역사회로부터 주목받았다.

한편, 목포YMCA와 목포YWCA는 개신교,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은 천주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목포포럼은 지역의 토론문화 형성을 표방하며 다양한 영역과 이슈에 관한 전문적인 토론과 대안 모색을 조직의 고유 사업으로 여기며 활동하고 있고, 목포시정지기단을 전신으로 하여 여러 시민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조직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목포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목포YMCA와 목포YWCA의 역할은 목포 시민사회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와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⁰³⁾ 시민운동이 1987년 6월 항쟁과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해방 직후 설립된 목포YMCA와 목포YWCA가 목포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1946년에 설립된 목포YMCA는 1948년 대한YMCA연합회에 정식 가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 중교YMCA 창설, 유치원 개설, YMCA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1959년 YMCA 전국대회의 결의에 따라 전남 해남읍 신안리 마을을 대상 지역으로 1960년대 향토건설사업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 들어 시민사회 토론의 장인 목포YMCA 시민논단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였고, 1979년에는 YMCA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목포YMCA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사회선교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목포YMCA가 조직한 중등교육자협의회는 교육민주화운동의 선봉이 되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기여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8년 목포YMCA 시민대학과 통일학교를 통한 시민 아카데미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 의식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 체계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등장은 시민운동단체로서 목포YMCA가 지니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업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목포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목포YMCA 시정지기단 활동, 지방자치정책대학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9년 목포시민단체연대 창립을 주도하였다. 2000년대에는 목포시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통일 광복60주년 통일자전거 보내기를, 2010년대에는 청소년 바른성장운동과 사회공동체운동,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수탁운영, 북한 어린이 식량난 돕기 평화통일 모금,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03) 『목포YMCA 50년사』와 『목포YWCA 50년사』 등 자체 자료들을 참고하였음.

목포YMCA는 시민의식 향상, 시민 여론 수렴, 지역 현안 대응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애드보커시 운동을 하는 것과 병행하여 목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단체의 역할을 해 왔다.

목포 YWCA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목포의 시민사회를 이끈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하나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이라는 여성단체로서의 성격과 함께 청년운동과 기독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다.

목포YWCA는 1947년 창립 후 초기에는 농촌 부녀자 계몽운동과 문맹퇴치사업, 야간여자중학교 창설 등 교육 사업을 실시하였고, 1960년대 들어 주부들의 사회봉사활동을 본격화하는 한편, 젊은 직장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했다.

1970년대 들어 1971년 신용협동조합 창립을 계기로 소비자보호운동을 강화했고, 가족법개정운동, 원폭 피해자 돕기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980년대는 여성 직업 개발 및 구직 기회 제공, 청소년 교육, 취약계층 여성 복지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1990년대에는 자원재활용운동인 아나바다운동(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으로 대표되는 환경 운동을 하는 한편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학교폭력문제, 통일 등 관심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1997년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현 여성인력개발센터)을 열었다. 목포YWCA는 목포 시민단체들과 목포시민단체연대를 조직하여 목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목포에서 일찍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를 개척하는 역할을 했다.

연대성은 시민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목포에서도 연대 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9년 10월 7일 목포초원관광호텔에서 미래를여는공동체,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시정지기단, 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목포지부 등 8개 단체들로 목포시민단체연대가 출범하였다. 상설 연대체로서 목포시민단체연대가 구성된 것은 시민운



그림 1 목포 YMCA 활동 모습



그림 2 목포 YWCA 활동 모습

동이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민중운동과의 분리 발전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목포 지역 시민운동의 성장 결과이다. 한편, 상설적인 연대 기구보다 사안별 연대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직 내부에서 대두되면서 2002년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목포시민단체연대로부터 탈퇴하고,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등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사안별 연대체를 이끄는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목포 시민운동은 상설 연대와 사안별 연대 구조 속에서 상호 협력을 했고, 공동의 시민 행동을 전개해왔다.

목포 시민운동은 1987년 민주화운동과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에는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영역 안에서 혼재되어 전개되다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다양한 영역의 시민운동조직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목포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1983년에 이루어진 '진로 주정공장 반대운동'은 환경이라는 현안의 성격과 대중적인 진행과정, 성과와 파급효과 등 여러 면에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전국의 환경운동을 선도했다는 면에서 지금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성공사례이다. 진로 주정공장 저지의 성과는 본격적인 '영산강 보존 운동'과 '유달산 지키기', '삼학도 보존 운동' 등 환경운동 영역을 확장시키고, 여러 환경단체들을 만들어냈고, 1997년 목포환경운동연합 설립으로 귀결되었다. 유달산 해변도로 확장 공사는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들과 심각한 충돌을 빚었으나 목포시와 시민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개선효과를 가져온 환경운동사례이다. 지역의 고질적인 환경 사안이었던 신안군 바다모래 채취는 환경단체들의 활동과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과감한 결정으로 바다모래 채취 불허 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역 사회의 정서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반부패운동, 예산감시운동은 지방자치 감시라는 시민단체들의 고유성을 잘 보여주는 영역으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부패운동은 공공 부문은 물론이고, 경제단체, 사학 등 민간 부문의 토착비리 대응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었다. 예산감시운동은 개별 단체의 활동보다는 연대 활동을 통해 예산 낭비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대응이나 목포시의회 예·결산 심의 감시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주민 참여 예산 조례 제정 등 제도 도입의 성과로 이어졌다. 목포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법」에 정한 주민의 조례 청구 권리를 활용하여 진행된 조례들은 제정의 의의와 함께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성공 사례들이다. 「목포시 학교 급식 조례」는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무상급식 조례로,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조례」 역시 전국 최초의 장애인 인권 조례로 기록되었고, 전국의 조례 제정을 선도하였다.

목포 시민운동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비판하며 정당 개혁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정치 개혁 시민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방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를 감시하고 대안 제시를 병행했다. 대통령선거나 총선, 지방선거 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목표의 정치 개혁 시민 캠페인은 일상적인 운동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정치참여 여부에 대한 이견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정한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지역 정치 현실은 시민운동단체의 조직적 부담과 역할의 한계를 가져와 목포 시민사회의 일상적 정치 개혁운동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국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 현안이다. 목포시와 목포 시민단체들은 2000년대 이후 하당난개발, 삼학도 경량전철, 유달산 야간조명, 해상케이블카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드러냈으며 아직까지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철도 폐선 부지 공원화운동’은 시민단체들의 대응과 호의적인 여론이 목포시의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탈바꿈된 사례이고, 사문화된 「보행 환경 조례」를 내실 있는 조례로 개정한 경우도 풀뿌리 시민운동이 가져온 결과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제도화되기 전인 2000년대 말부터 꾸준히 도시 재생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제세미나 등을 통한 전략 논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서산·온금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상당한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부터 목포에서 진행된 ‘마을 만들기운동’은 지역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커뮤니티 회복을 지향하며 저층 주거지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풀뿌리 주민운동이다.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과 구 동본원사 목포병원 등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근대건축물 보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문화유산 보호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시민운동단체들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다. 목포 시민단체들은 쇠퇴해가는 지역 경제의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의 위기 대응과 유통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운동 등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왔다. 반면 천일염 식품 인정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목포 시민운동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인권운동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진행된 시민운동 영역으로 기본권 확대와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시민캠페인,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활동을 해왔다.

제2절 목포 시민운동의 영역과 역할

1. 반부패 청렴사회 만들기 운동

1) 공공부문 반부패운동

부정부패는 지역 사회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부정부패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부실 공사 등을 유발하여 시민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반부패운동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목포에서도 반부패 캠페인이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청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금까지 청렴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목포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00년 11월 24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강연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정개혁시민연합 황성돈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는데 이 자리는 목포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부패 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2002년 2월 8일 경실련 전남협의회는 순천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부패의 양상과 수준이 행정 기관의 자정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청렴계약제와 시민 옴부즈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03년 8월 28일에는 2, 3호 광장 침수방지시설공사의 부실이 관리 감독 소홀 등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됐으며 관계공무원 문책, 대시민 공개 사과, 청렴서약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2005년 1월 목포시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청렴도 최하위권 평가를 받자 목포경실련은 「행정 정보 공개 조례」 개정, 공사 시민감독관 도입, 부실공사 방지 조례, 투명한 인사시스템 등에 관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 해 3월 17일에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5년 4월에는 새로운 목포시장이 추진하기를 바라는 반부패과제로 청렴 서약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부실 공사 방지 조례」의 제정 및 하자 검사제도 강화, 복합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 제도의 도입, 「부정부패 신고 포상 조례」의 제정, 투·용자 사업 심사기능의 강화 및 주민의견수렴절차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

2005년 7월 7일에는 시민 참여에 의한 부패 통제 시스템 구축과 확산을 위하여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등 목포 시민단체들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동으로 목포부패방지시민센터를 개소하고, 부패방지 민관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부패방지시민센터는 11월 10일 국가청렴위원회와 공동으로 9일 동안 지역 부패 신

고 상담 및 접수, 청렴시민 교육, 민관 공동 거리 캠페인, 민관협력토론회 등 투명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부패 방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에 공무원에 의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민·관 합동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 조직 내부의 부패 통제 미흡의 대안으로 외부 통제를 강조해 온 목포경실련은 2007년 목포시 시민감사관 도입에

관한 목포시의회 주관 토론회에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13년 12월 목포시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저질러진 부패 행위가 금품 수수, 부실 공사, 불공정 계약 등 고질적인 건설 비리의 전형을 잘 보여 준 것이라며 시민감사위원회, 청렴 계약 옴부즈만 등 외부 감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그림 3 목포부패방지시민센터 발족

2) 민간 부문 반부패 운동

(1) 목포수협 비리 대응

2009년 초 목포수협 조합장이 거액의 인사 비리에 관련되어 있고, 검찰이 조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자 목포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역 경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협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 목포경실련은 2월에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내부고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과 수협조합장에 비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점, 선장을 겸하는 선주들이 수협과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있다는 조합의 구조를 충분히 감안하여 사건을 대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에 엄정함을 바라는 것은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다. 토착비리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요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3월 4일 목포수협 조합장을 인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이튿날 다시 검찰에 대해 목포수협 조합장의 인사 비리 의혹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민들이 제기한 갖가지 의혹들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들은 수협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위판 행위 방해, 대출의 부당 회수 등 경제적

손해 야기, 선거를 얼마 앞두고 많은 상황에서 조합원의 피선거권 제약, 조합원 부당 제명 등 인권 침해적인 수협조합장의 전횡 등이다. 그리고 4월 13일에는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목포수협 조합장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등 선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목포경실련은 후보 등록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조합 이사회를 열어 후보에 등록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결정에 주목하면서 목포수협이 정관 개정이나 자체적인 자격심의사항, 이사회 결정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극도로 제약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초 인사비리 내부고발에서 촉발된 의혹들이 어민의 경제 행위 방해, 불법 선거과정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수협 조합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84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조합장 선거에서 자행한 상대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행위, 어민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과 인권 침해적 행위 등 여러 의혹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목포경실련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엄정한 재판을, 검찰에게는 뇌물수수 사건에 그치지 말고, 어민들이 제기한 의혹들과 불법적 선거 행위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 후 목포수협 조합장은 6월 30일 뇌물 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돼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1,54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목포경실련은 이 사건이 전면적인 목포수협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목포수협 조합장 비리 사건은 지역의 전형적인 토착 비리이자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반인권적인 행위였다. 또한 다수의 어민들과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계속된 주장과 언론의 지속적 보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내어 법의 심판에 이르게 된 사례이다.

(2) 대불대(현 세한대) 사학 비리 대응

교육부는 2005년 감사에서 대불대에 대해 141억여 원에 달하는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듬해 1월 3일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였으며 총장과 부총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전 교무처장 등 7명은 경징계, 그 외 29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로 대불대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대해 부당 집행된 111억 6,800만 원을 교비 회계에 보전할 것과 대불대가 부당 집행한 교비 29억 원도 회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기소와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도 사학 비리를 고발한 교수들에 대한 탄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등 학교 경영의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목포경실련은 2008년 1월 29일 대불대학교 영신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2월 8일에는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수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중단하고 교수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관선이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불대 사학비리 사건은 검찰 수사 1년 6개월, 법원 재판 7개월이 넘도록 계속되다가 4월 10일 전 대불대학교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현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로 1심이 마무리되었다. 목포경실련은 판결 다음날인 4월 11일에 즉벌 경영에 의한 학교 비리를 근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항소심을 앞두고 5월 21일 광주·전남의 국립·사립대학교 총장, 전라남도 교육감, 광주·전남 사립중·고등학교 교장, 전남도지사, 목포시장, 신안군수, 영암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사학 비리 관련자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6월 3일 목포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반성은 커녕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직자들의 탄원은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학비리 관련자들을 비호하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탄원을 비판하였다. 결국 6월 19일 항소심에서 전 대불대 총장에게 “전 총장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설립자로서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지역 사회는 ‘봐주기식 판결’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특별 사면인 2008년 8월 15일에 대불대학교 설립자인 이사장과 이 모 총장은 당시 사면된 비리 사학 경영진에 포함되었다. 한편 대불대학교는 사학 비리를 고발한 교수협의회 교수 5명을 3차례에 걸쳐 징계 해임 시켰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여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8월 5명 교수들을 재징계하는 등 보복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목포경실련은 8월 11일 ‘대불대학교 교원 탄압 중단과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불대학교에 대해 징계권 남용과 재임용 탈락 등 일체의 인사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장할 것과 교수협의회 소속 교원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촉구하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임시 이사 파견을 촉구하였다.

한편 2015년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영신학원 산하 세한대학교와 목포과학대학이 최하위 등급을 맞고 위기에 놓이자 사학비리척결전남시민행동이 9월 1일 즉벌체제 학원 경영을 해체하고 학교를 개방적으로 운영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내어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학 비리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분이 크고, 시민단체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비리 사학은 여전히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사학의 경영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공공재로서 설립자 등 특정인들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비리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정치 개혁 운동

1) 공명선거·정책 캠페인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후진적인 영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냉소는 여 전히 상당하다. 시민사회는 일찍이 정치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직접 후보자로 나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치 개혁 시민 캠페인의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공명선거 캠페인과 정책 캠페인을 들 수 있고, 특정시기에는 낙천낙선운동을 하기도 했다.

먼저 정책 캠페인을 살펴보면, 목포경실련이 2002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전남도, 목포, 무안, 신안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와 '복지공동체 목포를 향한 사회복지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장애인편의시설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목포시장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민선 3기 105대 신규시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이듬해인 2003년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정치 개혁 과제와 시민의 정치의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2004년 총선 때는 목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17대 총선 공명선거 및 선거 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장애인 투표 환경 개선과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목포 지역 장애인 유권자단이 발족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유권자가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방송 토론회가 무산되자 목포경실련은 영암·장흥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를 무산시킨 유선호 후보와 김옥두 후보를 성명을 통해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목포경실련은 전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라는 22개 국가 개혁 과제와 전라남도지사 보궐선거 도정 발전 정책 과제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그리고 목포경실련 무안군민회, 무안농민회, 농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무안·신안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어 후보 검증에 나섰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17대 총선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05년 목포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목포시장 후보의 중요한 덕목과 보궐선거 정책과제 21개'와 과제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비교하여 발표하는 한편,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가 공동으로 목포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었고, 신임 시장 취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6년 시민단체 공동으로 '5·31 지방선거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발족되어 목포시청 공무원의 정당 가입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국가청렴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렴 도시 만들기! 정책 선거 만들기! 시민과 함께!' 캠페인, 목포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11대 정책과제 및 조례 제·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캠페인을 이끌었다. 그리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주최하는 한편, 불참한 후보자에 대해 공당 후보답지 못한 태도에 실망하며 자성을 촉구하

는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 후 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남 지역 5·31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밖에 시민단체들은 정당의 무분별한 전략 공천을 비판하거나 한 반도 대운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를 묻는 질의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전라남도지사 후보가 당선 후 꼭 실천해야 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방선거 평가 및 민선 5기 목포



그림 4 목포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목포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후보자 토론회를 강조해왔으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입장에서 먼저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차분하게 선거를 평가하는 활동을 함께하였다. 그리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공천이나 부패 관련자의 공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2) 낙천·낙선 운동

시민단체들은 공명 선거와 정책 선거 운동에 머물지 않고, 공직 선거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 반대 운동인 낙천 운동과 낙선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경선과정이나 당의 공천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하여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고, 낙선운동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00년 1월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 발족을 들 수 있으며 당시 시민단체들은 4·13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천 반대자 64명과 반인권 전력 및 납세 비리, 저질 연행 관련자 22명 등 모두 86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목포에서는 목포YMCA 등 목포 시민연대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총선시민연대가 만들어졌으며 2000년 1월 25일 총선시민연대가 목포, 해남·진도, 함평·영광 등 전남 서남권 3명이 포함된 16대 총선 공천 반대 인사 명단이 발표되자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목포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천 반대 서명을 시작하였다. 2월 20일 목포역광장에서 ‘유권자 권리 찾기와 지역정치 타파를 위한 총선연대 범

시민대회를 열어 밀실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무능 부패 정치인 퇴진을 의미하는 옐로카드를 흔들며 목포역에서 차없는거리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2월 23일에는 고발센터를 개소하고, 공천 비리와 부적격 공천 대상자에 대한 제보접수,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목포총선시민연대는 고발센터 개소 성명서에서 정당들의 공천 결과는 국민들의 정치 개혁 염원을 외면한 것이고, 정치권에는 자정 능력이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선거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3월 23일 '정치개혁을 위한 유권자 행동 수칙 선포의 날' 행사를 갖고 유권자들이 빠짐 없이 투표에 참가해 오는 4·13 총선을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자며 참여를 독려했으며, 지역감정과 금품살포, 개인비리가 있는 후보자를 낙선시키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유권자인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고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들은 공명 선거, 정책 선거, 낙천·낙선 운동의 방식으로 정치 개혁 운동을 그 후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3.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운동

1) 학교급식조례 제정

목포시 무상급식조례는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무상급식조례로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룬 성과이자 전국의 조례 제정을 선도한 사례이기도 하다. 무상급식이 중요한 복지 쟁점이 된 것은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되었고,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과정과 2011년 8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민 투표 무산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년여 동안 무상급식은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고, 목포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09년 12월 3일 무상급식운동본부 주도로 목포시 무상급식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 운동이 시



그림 5 학교 급식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출처: 오마이뉴스

작되었고, 46일 만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하는 등 캠페인이 지속되었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로 인식하고, 목포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담겨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빠른 시일 안에 심의·의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주민 10,48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 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지속적인 캠페인 결과 2010년 3월 15일 목포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중·고교에 무상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조례를 수정, 의결하기에 이른다. 조례 제정 운동을 주도한 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민의 승리이자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며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교만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목포운동본부는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된 학교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목포시의 무상급식계획의 무상급식 실현 비율이 57%로 낮은 만큼 시의회가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 무상급식이 조속히 전면 실시될 수 있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2)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조례 제정

2004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 조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등 자치 입법을 선도하였다.

이 조례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에 대해 허가권을 쥐고 있는 목포시가 법에 정한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편의시설의 설치 이전과 설치 과정에서 미리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해 놓고 노후화되거나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목포경찰서와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2000년대 초 매년 모니터링하고, 목포시에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바로 잡아지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정한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 청구를 범시민운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4,600명의 유효 서명을 뛰어넘는 청구인을 확보하였다. 서명 운동에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 12곳, 자원봉사단체와 시민단체 7곳, 2개 대학 3개 학과, 목포시 소재 8개 가톨릭 교회 본당과 6곳의 개신교 교회, 4개의 아파트 자치회가 함께 참여하였고, 빈곤층과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가호호 방문까지 병행하여 조례의 제

정 취지를 알리고 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조례 제정 운동이 곧 주민교육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조례제정운동을 주도한 목포경찰서는 4,708명의 청구인 전원에게 통과 사실을 알리는 감사 엽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후 목포시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조례는 제정되었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전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포함된 점검 요원들이 직접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목포시장이 위촉하는 사전점검요원으로는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목포건축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시민들로 구성되며 시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 승인을 함에 있어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전인 5월에는 10개의 강의로 구성된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사전점검 전문가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나아가 2007년 10월에는 건축물 편의시설에 머물러 있던 사전점검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편의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공원, 도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 조례는 ‘이동과 정보접근에 있어 그 누구도 불편하지 않는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 첫 사례이자 인권 조례 제정 사례이다.

4. 예산 감시 운동

1) 바른예산시민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예산 감시

예산 감시는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시민단체의 주된 활동으로 일찍이 자리 잡았다. 2001년 목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바른예산시민네트워크는 목포에서 예산 감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6년까지 공동으로 진행된 지속적인 예산 감시 운동 결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주민을 위한



그림 6 목포시의회 예산심의 규탄 기자회견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를 담은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목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는 성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조례의 내용과 운영 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

2001년 11월 19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목포경실련, 목포민주시민협의회, 목포시정지기단,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목포포럼, 목포미래를여는공동체,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예총 목포지부, 목포KYC, 목포여성상담센터는 ‘목포시 바른 예산 수립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올바른 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바른예산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 환경, 역사문화, 홍보, 지역경제, 주민자치, 도시 건설, 시장 및 시의회의 판공비 및 운영비 등 8개 분야로 나눠 예산안을 평가하고, ‘시민예산’을 제안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산들의 삭감을 적극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분석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 예산 제안 활동을 함께했으며,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전자 소식을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회, 서명 운동 등 시민행동을 통해 저지하기도 했다. 2002년 말에는 2003년에 진행하려는 목포시 105개 시책에 대해 일일이 평가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여 큰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내 고장의 시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밋지 않은 충고.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른 시정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언론사로부터 받기도 했다.

2)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은 2003년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지방자치시민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시민 참여형 예산 만들기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그해 목포시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목포시의회가 주관한 참여예산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가 마련한 조례안을 발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6년에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2008년에 예



그림 7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산심의 대상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전반으로 확대, 동 단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 민간인 중심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개최 등의 보완사항을 담은 「목포시 주민 참여 운영 조례」 개정 청원서를 1,012명의 시민 서명 결과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일부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 진행된 예산 감시 활동의 예로는 목포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양산단 부채 일괄 상환 관련 동의안 가결 저지 운동이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지방 재정의 파행적 운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집행부와 시의회에 강렬하게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운동

1) 도시 난개발 대응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시 계획과 도시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개발일변도, 도시성장전략 위주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에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목포에서도 도시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현안들이 대두되었다.

2002년 12월 목포시가 삼학도에 고가 전용궤도를 이용한 경량 전철을 도입하고자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으로 하여금 2004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05년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경관 훼손과 경제성 미흡 등을 우려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토론과정부터 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5월 22일, 목포경실련은 목포시가 개최한 시민설명회가 정보제공과 의견 수렴 기능에서 미흡한 만큼 시험기간 종료 후 합리적인 사후 활용방안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경량 전철은 이후 운영 계획이 취소되면서 큰 갈등은 더 이상 유발되지 않았다.

하당에 숙박업소와 위락업소가 집중되면서 난개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목포시가 2003년 2월 하순에 해당지역 숙박 및 위락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최초로 목포시 건축위원회가 열리기 얼마 전인 4월 21일 목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물의 허가 규제는 허가관청인 목포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번 건축심의회는 개별 건축물을 심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목포의 도시 환경과 삶의 질을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행히 4월 24일 숙박업소와 위락 시설 등 3건의 건축허가신청을 부결한 목포시 건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시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도시 계획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은 도시 계획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나타났다. 위락·숙박 시설과 주거지

역간의 거리를 둘러싸고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와 목포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과 그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두고자 하는 시의회 간의 갈등이 생겨나 피켓 시위 등 갈등이 발생했으나 목포시의회가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도시 계획 공동연구회 운영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공동연구회는 5월 18일에 시의원, 시민단체회원, 교수,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은 유달산 야간조명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목포시가 유달산에 야간조명을 계속 설치하려고 하자 10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목포경찰서 등과 함께 야간경관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11월 16일 목포시에서 열린 ‘유달산 야간경관 설치 용역보고회’ 자리에서 목포시장이 시민단체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해 사과하고, 경관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기로 하여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듬해 2월 15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목포시 조례안이 유달산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뒷받침하는 졸속 내용이라며 비판을 거듭하였다.



그림 8 목포해상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목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해상케이블카 설치하는 1998년 목포시가 최초로 타당성을 검토하다 중단된 사업으로서 그 후 수차에 걸쳐 추진이 무산되다가 2008년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당시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가 관광 상품으로서 잠재력이 높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생태계 파괴와 경제성, 안전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였다. 2015년 목포시가 다시 설치할 뜻을 밝히고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은 목포 고하도 해상케

이블카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운동에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3월 3일 해상케이블카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공개토론, 해상케이블카 용역 분석, 타당성 용역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목포시가 10월에 해상케이블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시작하자 시민단체들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맞섰다. 그 후로도 강행하려는 목포시와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 간에 갈등은 지속되었다. 해상케이블카는 해를 넘겨 2016년 3월 목포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30년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2) 철도 폐선 부지 공원화

목포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생겨난 폐선 부지는 당초 녹지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되는 길로 계획되었다. 평소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광주광역시 폐선 부지가 푸른 길로 조성된 사례를 알고 있는 목포경실련과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7월 24일 ‘철도 폐선 부지의 친환경 경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폐선 부지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2003년 8월에 목포시가 마련한 ‘철도 폐선 부지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도 대부분 녹지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목포 시민들은 광주광역시 철도 폐선 부지가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광주시의 협조로 푸른 길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주장과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하였고, 2003년 11월에 열린 ‘목포시 철도 폐선 부지 활용방안 자문위원회’에서도 녹지축 기능이 강조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폐선 부지의 공원화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목포시가 뒤늦게 일부 구간을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갈등이 생겨났다. 시민단체들의 우려대로 2005년에 마련된 ‘철도 폐선 부지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도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2005년 4월 23일 목포환경운동연합과 목포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과 초등학교생 등 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 폐선 부지 공원 바라기 걷기대회를 갖고,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정문 앞에서 옛 동목포역까지 철도 폐선을 직접 걸으며 폐선 부지에 꽃씨심기와 펼침막에 그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11월 29일 ‘철도 폐선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를 목포경실련,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생명의숲 등이 함께 열어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듬해인 2006년 11월 3일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KYC, 목포YMCA,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자원복지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철도 폐선 부지의 녹지 중심 활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폐선 부지를 시민들과 함께 걷고, 호소문을 배부하는 등 ‘녹지 중심의 철도 폐선 부지 활용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하였다. “10m 녹지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10m 왕복차도를 둔다면 이 녹지를 공



그림 9 철도 폐선 부지 토론회

원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중앙분리대라고 해야 합니까? 목포시는 이를 두고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차도에 낀 처량한 녹지를 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 단체들이 함께 발표한 대시민 호소문의 일부이다. 시민단체들은 철도 폐선 부지 활용은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시 공무원들이 함께 폐선 부지를 함께 걸으며 폐선 부지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하고, 녹지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목포시는 철도 폐선 부지활용계획을 재검토하고 녹지 중심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라!”

“목포시는 ‘철도 폐선 부지 실시설계에 관한 민·관 합동 점검’ 요구를 수용하라!”

“목포 시민도 푸른 길을 갖고 싶다. 폐선 부지를 녹지축으로 활용하라!”

폐선 부지는 목포시와 시민단체 간의 협의 끝에 결국 녹지 중심의 공원으로 활용 계획이 변경되었다. 철도 폐선 부지 공원은 2014년 6월 완공된 이후 목포의 대표적인 도심숲이자 허파 역할을 하고 있고, 목포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산책로가 되었다. 그리고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15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목포시 철도 폐선 부지 웰빙공원조성사업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전국에서도 최상위 등급을 받는 성과를 안았다. 폐선 부지 공원화 사업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대응과 대안 제시가 큰 역할을 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3) 보행환경기본조례 제정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특히 보행권 확보로 구체화되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목포에서는 2006년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소와 목포경찰서,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보행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목포 간



그림 10 2007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집회

선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보도턱, 볼라드, 주정차 실패,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신호체계 등 보행 불편 요소를 조사하면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2007년에는 일찍이 제정되었지만 사문화되고 있던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목포시의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었다. 조례는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보행 환경 조성 기준 설정, 보행안전시설 설치,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보행 환경 관련 시설 설치 시 사전점검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목포 시가지를 행진하고 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보행권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목포시와 10개 향에 달하는 보행 환경 개선 계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운동은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와 보행권을 동시에 확대하고자 추진되었다. 2003년 목포경실련은 목포에 개설된 자전거도로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실패, 각종 표지 및 표시판, 자전거 보관대, 차량방지시설, 방해요인 및 위험요소, 연결성과 횡단편의성 등을 조사하고, 자전거도로 주변의 가게 상인과 자전거 통학생 인터뷰 조사, 자전거



그림 11 자전거 축제
출처: 백동규 블로그

도로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04년에는 목포자원봉사자협의회, 목포KYC,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와 목포경실련이 공동으로 자전거이용자 권리 찾기 시민캠페인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러한 노력은 2009년 녹색목포21협의회, 목포YMCA, 목포YWCA,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 시민연대, 목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목포자전거시민연대를 결성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수년간 캠페인은 지속되었다.

5)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도시의 해법을 찾고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목포에서도 공동화 되어가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커져 가는 가운데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목포에서 도시재생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데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서용산 재개발에 반발하며 적정 보상비를 요구하던 주민이 강제 진압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이른바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2월 3일 목포경실련은 목포시,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주민의 역할 제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참여형 원도심 재생으로 목포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2011년 10월 21일 목포경실련이 목포시,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과 함께 주최한 미국 미시건주립대 교수 마크 윌슨(Mark Wilson, 건설디자인도시계획대학 부학장), 아이린 심(Irene Shim, 건설디자인도시계획대학 글로벌프로그램 소장) 초청 세미나는 목포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을 화두로 던졌다. '도시재생의 세계적 흐름과 목포시 도시재생 방향' 세미나는 목포시 도시재생을 둘러싼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은 사람 중심의 도시를 창조하는 노력이라는 점과 도시재생에서 시민참여, 절차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도시재생의 요소로서 복합용도 개발, 보행 가능성, 효율적인 교통체계, 소매점 활성화, 역사와 문화, 오픈 스페이스 등이 제시되어 목포시 도시재생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서산·온금지구 개발 문제는 도시재생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목포시가 2005년 2월 서산·온금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에 착수하여 2007년 2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서산·온금지구를 주거 중심형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3,800억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서산·온금동 일대에 2018년까지 3천여 세대의 뉴타운식 개발 계획을 세우자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환경을 침해하고, 원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업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저층 주거지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대안을 내세웠다.

2011년 12월 12일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도시 재정비를 이유로 유달산 경관과 도시 미관을 무시하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도시재생은 조망권과 경관을 해치지 않고 원주민이 재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타운식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주거대책에 대한



그림 12 목포시 도시재생대학(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우려는 2013년 10월 목포여성의전화, 목포대학교 복지사회연구소,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1일 목포여성의전화는 ‘서산·온금 재정비지역 어르신의 생활실태 및 재개발 관련 욕구에 관한 보고회’에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와 경제적 지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소외된 노인들의 생활실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목포시 목원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선정되자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입법예고하였다. 목포경실련은 2014년 9월 15일 목포시 도시재생 지원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도시재생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민간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목포문화연대는 2014년 12월 10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시범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목원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진행된 사업이고, 200억 전체 사업비의 30%에 달하는 60억 원을 트윈스타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이 목포시의 원도심 보수정비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2017년 6월 28일 목포포럼은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파악하고, 목포시 도시재생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서산·온금지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도시재생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더욱 커져갔다.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당초 3개 구역으로 추진되었으나 2·3구역

은 2016년 해제되었고, 1구역만 층수 조정을 요구한 전라남도 조건부 승인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9월 12일 목포문화연대,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목포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목포도시재생 시민네트워크 준비모임’은 성명을 통해 ‘서산·온금동은 항구도시 목포 어촌문화의 뿌리이자 풍광이 아름답고 문화인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뉴타운식 재정비사업을 철회하고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13일에는 목포경찰서도 ‘목포시의 서산·온금지구 1구역 재정비사업 등 목포시의 도시정책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도시 외연을 확장하는 ‘개발’에 치우쳐 도심 쇠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재개발식 정비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 목포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운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활동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 4월에는 협동조합, 지방자치, 주민자치, 생태공동체, 대안교육, 주민발의·조례제정, 자활공동체 등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전국의 단체들이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연대와 확산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마을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만들어 가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지역공동체 구현 등 대안적인 시민사회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마을만들기는 자치의식의 성장을 꾀하는 자치공동체 만들기, 물리적 변화를 꾀하는 삶터 만들기, 경제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경제공동체 만들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공동체 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목포에서도 일찍이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있어왔지만 마을만들기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담론적 논의나 개념 정립, 목포마을만들기 전략,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운동은 2000년대 초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시민단체인 목포KYC가 푸른목포21협의회와 협력하여 진행한 원산동 마을신문은 마을만들기운동의 사례이다. 목포KYC는 마을신문을 단순한 매체로 인식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문의 제작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역의 지도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원산동 아파트부녀회, 자생조직 현황 파악과 지역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마을신문 기자 위촉, 간담회, 제작 등의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고·칼럼·지역이슈·현안 탐방·기획연재·환경상식·동 행정 소식 등을 담은 8면 신문물을 발행했는데 비록 오래 가지는 못했으나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원산동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목포KYC는 2005년 8월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유달동, 충무동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푸른 꿈 공부방’을 개설했다. 관 주도의 폐쇄적 어린이 공부방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공부방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공동체적 마을만들기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2007년에 시작된 연산푸른음악회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녹지공원의 야외무대를 활용하였고 주민 건의로 시작된 사업으로 목포푸른음악회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동 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연산동 완충녹지공원에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마을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는 문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지향을 갖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사단법인 행복누리는 2013년부터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안전하고 여성친화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크게 보도된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자 사후대책이 아닌 범죄 예방 및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 환경 개선 활동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도시공간의 위험 요소와 불편 요소 등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건의하는 활동이다. 모니터링 요원 교육, 현장조사, 워크숍, 개선 건의, 발표회 등을 통해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를 조사하고, 어린이 안전지도 만들기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역량강화 사업 ‘마을도 삶도 푸르게 푸르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주민 조직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운동 사례이다. 마을학교, 공개특강, 협동조합교육, 우수마을 견학과 주민전체회의, 송년 사례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주민지도자 과정으로서 마을학교를 개설하고, 독거노인 정서지원, 전래놀이 공동체활동, 환경정화 실천을 통한 의식나눔, 문화유산 함께 걷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실천 활동, 목포동네모임 등 다양한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의 변화를 꾀하는 동력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2016년 11월 신안인스빌아파트의 ‘밝고 건강한, 인스빌 행복공동체 만들기’가 행정자치부 주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아파트 공동체 운동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한지공예, 생활자수, 노래교실, 손뜨개, 비누·양초 만들기, 스마트 사진반, 수제 초콜렛 만들기, 바리스타 체험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쉼터 조성 등 물리적 환경을 가꾸는 활동을 하고 있다.

목포에서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려면 주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목포시의 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과 함께 마을만들기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주민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과 주민리더 육성 등의 과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6. 환경운동

1) 진로주정공장 저지 및 영산강 물 살리기⁰⁴⁾

목포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역사에서 1983년에 진행된 진로주정공장 반대운동은 계기, 진행과정, 성과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시민운동으로 기억되고 있고, 특히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다.

주정공장 반대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목포의 열악한 물 사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목포는 개항 이후 거의 한 세기 동안 물 문제에 시달려왔다. 바닷가에 위치한 탓으로 양질의 지하수와 지표수가 없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도 모두 수돗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나 수도시설은 부족했고, 취수원과의 거리도 멀고, 그나마 갖춘 시설조차 노후화되어 누수율이 40%에 달할 정도여서 수돗물 값이 매우 비쌌다. 1978년부터 영산강 물이 극도로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취수장도 물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산호 건설은 고질적인 홍수와 범람, 가뭄, 해일 등의 자연재해를 해결하고,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수돗물 공급 면에서 목포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목포시가 영산호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을 결정하고, 무안군 몽탄면에 취수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시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영산강 상류에 주정공장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민들은 대규모 오염원이 될 게 명확했던 주정공장 건립을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분노했다. 더구나 시민들은 목포 삼학소주와 보해소주공장에서 흘러나온 ‘아랭이’, 곧 술 찌꺼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곧 공해를 접해 본 경험이 있어 영산강 상류 주정공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왔고, 영산호 수질오염 방지대책위원회의 주장, 곧 주정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은 유기질로 구성되어 있고, 부패과정에서 악취와 산소 부족에 따른 물고기 폐사 등 지속적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더구나 배출허가 기준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오염이 누적되는 만큼 이런 물은 식품위생법상 음료수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시민들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다. 주정공장 반대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국제라이온스클럽, 국제로터리클럽 등이 만든 국제봉사클럽협의회와 상공회의소, 예총, 개발위원회 등 4개 단체들로 구성된 목포 지역단체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이들 단체들의 리더들과 회원들의 참여는 진로주정공장 추방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04)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 25년사』, 2007 내용을 요약 정리했음.

‘영산호를 살리자’는 기치 아래 전개되었던 진로주정공장 추방운동은 수질오염 방지 대책위원회 탄생, 환경청의 배출시설 설치 불허와 번복, 시민의 승리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래 제주도에 있던 진로주정공장은 주정원료 폐기물인 고구마 찌꺼기의 해역 오염문제에 따른 공해업소 지정, 시설 노후화, 1982년 9월 30일자 주정공장 장소 임대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영산강의 지류인 몽탄강 상류 영산포 삼영리로 이전을 결정하고, 그해 10월 31일 이전허가신청을 냈다. 대다수 영산강 유역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소수 인사들에 의한 교섭형태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목포 단체들은 환경청장, 전라남도지사 등 9개 기관장에게 반대 건의문을 발송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83년 5월 20일에 목포시와 금성시(현 나주시)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 단체, 교수, 환경청 직원 등 17명이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나중에 영산호보존회 초대회장을 지낸 서한태 박사에게 목포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주정공장에 대한 상세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사태는 크게 달라진다. 이미 주정공장이 몽탄강 상류 영산포 삼영리에 들어서서 12억 원을 투자하여 보수되고 있고, 배출될 폐수는 하루에 2,700여 톤에 이른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한태 박사는 주정공장 설치 반대운동을 주민운동으로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6월 17일 ‘국제봉사클럽협의회’ 소집을 요구했다. 6월 17일 오후 5시 YMCA 2층에서 국제봉사클럽협의회 회의가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결사반대를 결의하고, 다음날 지역단체협의회가 열리게 된다. 18일 회의에서는 범주민운동을 추진할 상설기구 결성을 결의하고,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23일 열린 상설기구 창립총회에서 상설기구 명칭을 ‘영산강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로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대책위원회는 “영산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어떤 시설도 좌시하지 않는다. 23만 시민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것은 살인 행위로 간주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영산호 수질 보전을 위해 온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수질 보호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영산호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준다. 영산호 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에 23만 시민이 총력을 경주한다.”라고 밝혔다. 다음날부터 목포 주요 장소에서 가두서명과 시민 리본 부착, 유인물 배포, 가두방송 등 본격적인 시민캠페인이 진행되었고, 24일에는 목포 약사들의 결의문에 이어 25일에는 리본달기, 유인물 배부 등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빠르게 반대여론이 형성되었다. 6월 27일에는 가두방송이 시작되었고, 영산강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도 기획, 총무, 홍보, 동원, 학술 등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공해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일부 중앙 일간지와 지역 언론에서 영산강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가 보해양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주정공장 폐수가 영산호 오염과 관계없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금성시는 찬성하고 목포시는 반대하고 있다는 등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들도 기사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추방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7월 4일 도지사가 배출시설 설치를 불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민들은 영산호 주변의 지역 주민들

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7월 7일에 수질오염 방지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무안, 함평, 해남, 영암 등 4개 군 주민들이 포함된 영산호유역환경보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홍보, 강연 등을 통해 공해문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진로 측은 7월 27일 환경청에 소원을 제출했고, 전남도지사가 월권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뒤늦게야 환경청에 의해 도지사 결정이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환경청 결정요지는 ‘법적인 허가



그림 13 영산호를 살리자(『뉴스메이커』 665호)

요건을 갖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공장가동을 하겠다는 것을 공해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방지시설의 설치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는 요지였다. 영산호유역환경보존위원회는 주민의 생존권보다 일개 기업의 이윤을 중시한 처사라며 비판하면서 8월 23일에 근로자회관에서 ‘영산호유역환경보존위원회’ 창립 총회를 갖고 더욱 대중적인 시민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고,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가톨릭사도회연합회 등 교파를 초월한 종교계의 참여도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환경청장과 국세청장 면담, 동아·조선·한국·중앙일보 등 주요 중앙 일간지를 방문하여 목포사정과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하였고, 공청회와 궐기대회를 9월 25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내 전역에 “한 기업인의 이권과 영산호 유역 50만 주민의 생존권이 대결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뜻있는 목포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는 요지의 유인물을 대량으로 배부하였다. 궐기대회 당일 참여 인원이 적어도 5천 명이 될 거라는 예상으로 서한태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들과 목포시장, 경찰서장, 검찰지청장, 안기부지소장 등과의 회합이 이루어졌다. 29일로 예정된 도지사 결재 마감일이 철회되는 대신 25일 궐기대회도 연기되었으나 10월 17일 이미 이틀 전에 도지사로부터 배출시설 허가가 났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항의 서한을 받은 국무총리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금성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금성시장은 건축법을 들어 적법한 조치였음을 강변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환경보전법」 제15조 “배수시설 설치 허가 조항에서 배출시설은 반드시 허가증을 교부받은 연후에 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 감사원에 고발하였으나 문제 해결은 바로 되지 않았다. 이후 영산호유역환경보존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마침내 그해 11월 8일 동아·중앙·조선·한국 등 중앙 일간지에 주정공장을 반월공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목포 시민들이 승리한 것이다. 영산호 유역 주민들은 만세를 불렀고, ‘영산호 보존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영산호

유역환경보전위원회는 영산강의 오염원인인 광주천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광주천 종말 처리장 가동 촉구 등 상당기간 동안 활동을 계속하였다. 진로주정공장 반대운동의 성공은 삼학도와 유달산 보전운동, 1988년 목포 녹색연구회 창립, 1992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회의, 1996년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97년 6월 24일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으로 모아지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지방자치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남 지역의 환경운동을 이끄는 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2) 유달산 해변도로 확장공사 대응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2000년 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북향과 내향을 잇는 국도 1호선 연결 도로 개설 공사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유달산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향 삼거리에서 해양대학교를 거쳐 구 조선내화 앞까지 총연장 3,700m, 폭원 25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2월 22일 유달산해변도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목포시가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북향과 유달산을 연계한 해안도로 개설로 관광 루트로 활용하려는 계획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 폭을 줄이고, 절개지를 최소화하는 등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4월 1일 유달산해변도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6개 단체로 구성되었고, 5월 26일 유달산 해변도로 확장공사 중단 기자회견을 가져 유달산 해변도로 확장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5월 29일에는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가 14개 단체 참여로 강화되고, 6월 5일 목포역 광장에서 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목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대책위원회에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시정지기단, 민예총 목포지부, 미래를여는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목포KYC, 한국환경보호협의회 목포지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대반동주민대책위원회까지 참여하였으며 이 단체들은 ‘우리의 자존심 유달산 우리가 지키자!’를 주요 슬로건으로 채택하였다. 집회를 마친 후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6월 19일 목포시청 앞에서 상여를 앞세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6월 22일에는 시의회가 나서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회는 해변도로가 관광도로 기능보다는 대형 화물차량이 통과하는 산업도로가 될 것이므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노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목포시는 설계대로 시공하되 유달산 절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6월 27일에는 유달산 지키기 차량투어가 19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목포대 송림캠퍼스에서 후레쉬마트까지 ‘근조 유달산’ 만장을 단 차량을 앞세워 진행된 차량투어 다음날인 6월 28일에 목포시의회가 유달산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7월 20일에는 목포부시장에 대책본부를 방문한 데 이어 7월 31일 목포시와 대책위원회 간 10개 항의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협상을 계속한 끝에 결국 8월 1일 오후 4시 시청상황실에서 열린 5차 협의회에서 유달산 일주도로 삼거리 구간과 해양대 도서관 앞 비탈사면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공생원 앞 파출소와 노인정을 철거해 도로부지로 활용하며, 노인정을 다른 곳에 신설하기로 하는 등 10개 항에 합의하면서 유달산 해변도로 문제는 마무리되었다. 유달산 일주도로 공사에 관한 시민단체들의 대응은 연대성과 규모, 성과 등의 측면에서 진로주정공장 저지운동에 이어 목포환경운동사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4 유달산지키기운동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 25년사』, 2007.)

3) 바닷모래 불법 채취 저지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막대한 양의 채취 등 불법채취인 경우도 많아 어민들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들의 대응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에 지역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목포와 신안의 환경단체들이 바닷모래 불법채취 현장을 단속·감시하고, 연이은 불법 사례 고발과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2002년 10월 21일 신안군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모든 허가도 종료 후 마감하겠다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발표를 하게 되었다. 바닷모래지키기대

책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전 해역으로 바닷모래 채취 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대응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03년 12월 12일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무안군 모 개발회사가 불법 채취한 바닷모래를 판매하고 있다고 목포해경에 고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여전히 신안, 진도, 영광 등지에서 자행되는 불법 모래 채취에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2003년 2월 11일에는 목포 시민연대가 목포MBC 바닷모래 불법 채취 보도와 관련해 바닷모래 불법 채취는 해당 지자체와 해경 등 관계기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목포 삼학도 부두를 비롯한 무안, 신안의 모래 하치장에 반입되는 바닷모래에 대한 출처조사를 촉구했다. 그해 4월 2일에는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목포해경이 바닷모래 불법 채취를 방조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어민들이 불법 모래 채취를 신고해도 해경이 늦게 출동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해경과 모래 채취업자들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경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불법 모래 채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선박 압류, 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력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의 현장 대응과 고발행위,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태도로 인해 바닷모래 불법채취의 문제점을 시민들이 알게 되었고, 바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성과를 가져왔다.

7. 문화유산 보호 운동

목포 지역의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진행한 사업 중 문화유산 보호운동은 비록 다른 현안에 비해 자주 등장하지 않은 주제이나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낸 시민운동 영역이다.

1)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보존

동양척식회사는 일제가 한국 경제를 착취할 목적으로 설립한 대표적인 수탈기관으로 전남 각지 17개 농장을 관리한 목포지점은 동척 지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작료를 거둔 농민 수탈기관이다. 1920년경에 건립된 목포지점 건물은 후기 르네상스 양식에 장방형 평면의 2층 석조 건물로 동척 지점 중 가장 잘 만들어졌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이



그림 15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목포시청 홈페이지)

후 해군 헌병대 건물로 쓰였지만, 1989년부터 10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일제 잔재이면서 헌병대 건물로 활용되어 부정적 인식이 컸던 건물이다. 해군 목포 해역방어사령부는 건물 붕괴 위험과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분위기 속에 1995년에 건물 철거를 결정하고, 부속건물을 철거하던 중에 학계와 목포문화원 등 시민단체들의 철거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본관 건물의 문화재 가치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목포시에 요청하였다.

1995년 8월 5일 유원직, 신상용, 김영목, 박혁순, 박찬승, 고석규, 강봉룡, 김지민, 오양기, 박종철, 이종화 등 목포대학교 사학과, 건축공학과, 도시및지역개발학과 교수 11명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건물 철거를 반대함’이라는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동척 목포지점은 비록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의미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 같은 유적을 아무 검토도 없이 파괴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죄악이다.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학살 유적지를 잘 보존하여 나치 독일의 반인간적 행위를 역사에 고발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아직도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시해를 베풀어주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수탈적 지배를 상징하는 동척 건물을 헐어버린다면 누가 패재를 부를 것인가는 뻔한 이치이다.”

교수들은 이 건물을 일제수탈사박물관이나 개항장 자료관으로 활용하면서, 동척이 소재하고 있는 구 일본인 거류지가 다른 개항장과 비교할 때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므로 구 영사관 건물, 일본인 주택, 유달초등학교 등을 하나의 관광코스로 연결하고, 인근에 목포 출신 문인들의 문학관을 차례대로 세운다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덧붙였다.

예산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목포시는 보존을 주장하는 여론에 밀려 보존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목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목포 시민단체연대회의 준비위원회는 1999년 8월 28일 ‘옛 동양척식 목포지점 건물 철거시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동양척식 목포지점은 국내 18개 지점 가운데 최고 실적을 올렸던 민족자본 수탈의 현장이자 지난 1980년 헌병대로 사용될 당시 5·18 민중항쟁에 참여한 지역 민주 인사들이 고초를 당했던 역사적 현장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밝히고, 일제수탈역사관이나 항일운동기념관으로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구 동양척식회사 건물 보존을 위한 서명운동과 부지매입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 철거 위기를 넘긴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은 1999년 11월 20일 전라남도기념물 제174호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006년 7월 20일 원형복원 공사를 끝내고, 목포근대역사관으로 꾸며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구 중앙교회) 보존

1930년대 건립된 일본 동본원사 목포별원은 일본 사찰 법당으로 사용되다가 1957~2007년에 중앙교회로 사용된 특이한 이력과 함께 석재를 이용하여 일본 목조 불당의 건축 의장 요소를 표현한 보기 드문 외관을 지니고 있는 건물이다. 1970년대 이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시국을 걱정하며 만나던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재야인사와 목사들이 1차 회의를 하며 범시민 투쟁을 결의한 장소였다. 또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통일운동에서도 중요한 집회장소로 자주 이용되어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목포시는 2002년에 작성된 『목포역사문화의길 조성기본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유산으로 평가했으며, 목포시 홍보자료와 관광영상물에서도 문화유산으로 소개하고 있듯이 문화재청과 학계는 물론 목포시 스스로도 가치를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이다.

목포시는 2003년에 이 건물을 사들여 대한민국예술원 작가들의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도심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목포시의회 본예산까지 통과하여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생각을 바꿔 이례적으로 목포시의회에 다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하여 매입계획은 무산되었다.

2004년 3월 4일 전라남도가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고, 문화재청도 2004년 11월 10일 문화재 등록 예고를 하였으나 건물 소유주인 목포중앙교회가 등록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해 목포시와 부지매입 협의를 마쳤다. 12월 11일 목포문화연대가 처음으로 중앙교회 건물 철거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으나 목포시는 예정대로 12월 13일 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실시하고, 본관을 철거할 경우 64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 보존하게 되면 40면 주차장밖에 만들 수 없다며 교회 건물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경실련은 12월 20일 중앙교회 건물 철거방침을 철회하고, 목포시가 매입·보존하는 한편, 계속 미뤄지고 있는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목포문화연대는 이듬해 2007년 1월 8일 중앙교회 철거방침 반박 성명을 내고, 중앙교회 본 건물을 보존하는 대책 수립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교회가 낡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시민단체와 목포시 간의 갈등양상이 지속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만든 심의기구인 ‘목포시문화유산위원회’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내린 철거 방침은 잘못되었다는 것과, 즉시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구 동본원사 건물 및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면

서 시민단체들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2007년 2월 21일 문화재청에서 목포시에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현황 측량 협조 요청과 함께 중앙교회 본당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직권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구성된 목포중앙교회(구 동본원사) 건물 보존 시민대책위원회가 2월 28일 목포중앙교회 건물 철거 계획 반대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하였다. 당시 목포중앙교회(구 동본원사) 건물 보



그림 16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목포시청 홈페이지)

존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목포경실련, 목포권기독교교단협의회, 목포문화연대, 목포민중연대, 목포민주화계승사업회, 목포민예총,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목포KYC, 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조각가협회, 현대삼호중공업 우리옛것을찾아가는사람들 찾고개 등 13개 단체에 달했다.

대책위원회는 3월 9일 ‘위기에 처한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목포중앙교회 예배당 건물 보존의 필요성을 담은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대량으로 배부하고 기관, 단체들에게도 발송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이어서 “문화재청은 목포중앙교회(구 동본원사) 건물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내어 목포시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도 조성하고, 문화유산도 살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한편, 문화재청에는 건축물 매입과 개보수, 답사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문화유산이 철거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의 역할을 촉구하였다.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과 목포대학교 고석규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의 대외적인 노력이 계속되면서 문화재청은 2007년 3월 9일 근대문화유산인 목포중앙교회 본당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고, 7월 3일 등록문화재 제340호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조선 후기 백자 가마터 보존

목포대학교 박물관은 2001년 무안공항 건설 지역 문화유적 시굴조사 과정에서 백자 가마 유적을 확인하였다. 조선 시대 말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백자 가마터에는 연소실, 번조실, 배연부 등 가마 구조가 매우 양호하게 남아있었고, 작업장과 퇴적장 등 주변 작업장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

말기 지방 백자 가마의 구조와 도자 제작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에는 일부 유물만 수습할 뿐 유구는 활주로 아래에 그대로 묻히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목포경실련 회원들이 이곳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체험을 두 차례 진행하면서 백자 가마터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에 보존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발굴 주관기관인 목포대학교 박물관에도 가마터 보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역 이슈로 대두되었다. 결국 시민단체와 대학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선 유구를 전시하여 보존하고, 나중에 장소를 이전하여 복원하기로 결정되면서 활주소에 묻힐 뻔한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8.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

1)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목포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지역 경제에 관한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고, 유통대기업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한 골목상권 살리기도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목포경실련은 2001년 당시 목포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목포-연운항 취항을 앞두고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전남 서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지역 경제의 대안 찾기에 나섰다. 2003년 3월 5일 목포 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전남 경제 살리기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워크숍'이 열려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관광 활성화, 농가소득 제고 등의 방안에 대해서 전략을 모색하였다. 2005년에는 목포경실련이 재래시장연합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연합회, 대리점연합회 등 상인단체와 공동으로 동네 경제 살리기 간담회와 도소매업 경영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동네 상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했다.

2006년 6월 26일 목포 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형할인점에 의한 역외 유출을 지적하고, 매출액을 지역 시중은행에 1개월간 예치, 지역 우수상품 판매 상설코너 개설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이마트 본사에 보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과 2007년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저항이 격렬하게 나타난 해로도 기억된다. 8월 31일 광주·전남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제 주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대회 개최 등 수차례 시민 행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다음날 3일에 한미 FTA 협상 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는 한미 FTA를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밀실·굴욕 협상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했으며 이후 비상시국회의, 집회와 시위 등 대규모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2007년 광주에 연고를 둔 빅마트를 롯데슈퍼가 인수하여 지역 상권과 상인들에게 큰 피해가 나타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3월에 지역시민단체들과 목포중소슈퍼연합회 등 상인조직들이 롯데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2012년에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하여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을 둘러싼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에서 목포경실련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2012년 2월 20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제정 및 동네 상권 활성화 방향’ 토론회를 상인조직, 시민단체, 목포시, 목포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목포시 조례 제정방안을 논의하였고, 영업규제 조례가 동네 상권을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2012년 3월 2일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목포 시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설문조사는 목포 시민들의 대형마트 이용실태와 지역 상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목포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제정과 지역상권 살리기 소비자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으로는 대형마트 이용 빈도, 대형마트 이용 이유,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어려움 수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규제 조례 필요성, 의무휴업일 지정의 지역상권 기여도, 의무휴업일 지정이 대형마트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정도,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 정도와 불편 감수 의향 등이며 2월 18일~26일 9일 동안 목포에 사는 20세 이상 성인 3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목포경실련은 이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인들의 자구적 노력, 목포시의 동네 상권 시설 개선 지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범시민적인 소비자운동의 전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012년 6월 28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5곳이 영업제한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 절차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 박탈 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기업 측 승소 판결을 내리자 목포경실련은 법원의 판결은 지방자치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므로 비판의 여지가 있고, 동네상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8월 14일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을 통해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을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

를 규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남악에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상인들로 시작된 반대운동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까지 확산되었다. 비록 입점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상권 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7 남악 롯데아울렛 입점 저지운동
출처: 『신안신문』 2015. 03. 30.

2015년 10월 22일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남악신도시 정화시설 비용 등을 감안해서 목포시, 목포시의회에 전라남도과 무안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2016년 3월 4일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롯데복합쇼핑몰에 이어 창고형 대형마트가 남악지구에 진출하기 위해 전남도에 건축 심의를 요청하자 조직을 더 확대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3월 31일 남악복합쇼핑몰과 대형창고형 매장 입점 저지를 위한 목포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상인 위주로 구성된 입점저지추진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조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16년 12월 5일 남악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가 주민 452명의 동의를 받아 GS리테일 건축물에 대한 무안군의 인허가와 사용승인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31일 감사원은 남악복합쇼핑몰은 목포시가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안에 위치한 남악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복합쇼핑몰은 2016년 12월 결국 개장되었고, 예상대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천일염 식품 인정

오랫동안 광물로 취급되었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학계의 꾸준한 연구와 함께 시민단체의 역할이 함께 작용하였다.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2005년 당시 전국 천일염 생산면적 4,915ha 가운데 전남 지역이 3,373ha로 생산면적의 68%를 차

지하였고, 특히 신안군은 2,186ha로 전남 지역 면적 중 72%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천일염은 이 당시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 의해 식용소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소금 관련 법률인 「염관리법」은 1963년 제정 이래 염전 개발, 폐전을 통한 염전 구조조정을 담고 있을 뿐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담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염전 생산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목포대학교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시민단체인 목포경실련에서 천일염을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천일염을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 올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와 식약청을 대상으로 염산업 발전기금 운용, 대한염업조합 관리·감독, 천일염의 식염 불가 이유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염관리법, 염업조합법,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등 천일염산업에 관련된 제도와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천일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목포경실련의 발표는 천일염산업 육성 필요성과 식품인정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천일염은 식품공전의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식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사회적 경제 활성화

한국 사회는 고도성장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양극화,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재정여력은 약화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화와 시장경제의 공정성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도시·농촌 간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활기업 등의 경제주체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유효한 정책으로서 평가받았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목포 시민단체들은 일찍이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으로 영역을 확대해왔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자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오던 목포YWCA는 ‘목포YWCA 희망지원센터’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였고, 2009년 5월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가사, 보육 도우미, 친환경 밑반찬 배달, 친환경 생명 살림터, 방과 후 아동 지도 등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친환경 밑반찬 제공, 양재홈패션, 목포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꿈나무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고령자·장애인 등 밑반찬 지원, 취약계층 산모 이불 및 베개커버 제공 등 사회공헌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2004년 전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5명의 이주여성을 간병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간병 사업이 정착되면서 2008년 10월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 후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간병사업을 포함하여 제과 제빵사업, 두부사업, 체험학습장 운영과 목포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토판천일염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가 어학사업단을 만들어 참여자 전원을 어린이집에 연계 취업하도록 지원하면서 2008년 10월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장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기업 설립에서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이어졌다. 2012년 2월 10일 출범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남네트워크는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민관협의체로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및 유관단체들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립 및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서 최초에는 사회적 기업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출발하였다가 현재는 사회적 경제 전반의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사무국을 목포경실련에 설치한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업 실태 전수조사, 전남도민 설문조사, 목포시 구매계약 및 MOU 체결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 품평회, 사회적 기업 제품 소비자 체험단,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등 사회적 경제에 관한 시민인식 전환과 기업 역량강화 및 경영지원 등의 활동을 했고, 사회적 경제 관련 국제교류 및 심포지엄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9. 인권 운동

목포의 인권 운동은 군사 독재에 항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권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라고 볼 수 있다. 목포경실련은 2001년 개인택시 면허 규정에서 면허 발급 시 ‘동일’ 택시회사에서의 ‘근속’ 및 ‘근속 중’인 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도록 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노동기본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론화하였다. 이듬해에는 목포시에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 청원을 하였다.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조항 삭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운동 결과 목포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조건으로 적용된 동일회사 근속 경력 우대조항은 2008년 1월 1일을 기해 폐지되었다.

2003년 11월 13일 목포여성상담센터와 목포여성의전화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전국 연계망 구축 토론회와 워크숍을 열어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사례 발표와 성매매 피해사건 수사 절차와 피해자의 애로점, 피해자 법적 보호와 법률 지원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한편, 다음날에는 ‘성매매 없는 하당 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퍼포먼스와 거리행진을 했다.

2004년에는 목포경실련이 ‘과령’을 이유로 장애인의 특수학교 입학을 불허한 전라남도교육청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지침은 폐지되고 입학은 허용되었다. 2005년과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사업으로 장애인과 빈곤계층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실태 및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6년에는 ‘재단법인 교육과 인권’의 후원으로 8강으로 구성된 목포인권강좌를 개설하고, 이듬해 인권교재 『목포인권운동 첫걸음, 목포에서 인권을 생각하다』를 발간하였다.

2007년에 목포경실련이 목포 인권 취약계층 인권 교육을 전남농아인협회 임직원, 목포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목포자원봉사자협의회 관련 빈곤계층 및 장애인, 목포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직원, 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무안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2008년에는 인권 취약계층 인권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목포에 거주하는 빈곤계층과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 계층 149명, 목포시 등록 장애인 165명)을 대상으로 주거 상황, 경제 상황, 건강과 보건, 노동 및 고용, 교육, 사회적 관계, 사회복지서비스, 지역 사회의 인권 상황, 인권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권 상황을 사회에 고발하였다.

2009년 9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만들어진 어촌계 정관 중 제14조 ‘계원의 연대책임’ 조항이 어업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10년 3월 15일 34개의 장애인단체들과 목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1년 동안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작성한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청원하였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2010년 4월 23일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조례는 전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 차별 행위 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회 보고,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영화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들에 의해 실시되는 인권영화제가 2012년부터 2017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해 진행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목포인권영화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극단 갯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MBC 시청자센터, 아이쿱목포생협,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경실련, 사단법인 행복누리,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사단법인 전남농아인협회 목포시지회,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였다.

목포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2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1월 가정폭력상담소로 출발하였고, 출범 후 여성 폭력, 여성 복지, 성 평등 등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인권단체이다. 가정평화지킴이 선언 운동과 이동상담, 어린이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 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워크숍과 거리 캠페인, 성 평등 지역 사회 만들기 사업, 목포 지역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실태 및 요구조사, 선생님 인권감수성 교육, 학교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인권강사 양성 교육 등 넓은 활동영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 인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목포여성상담센터는 2010년 8월 14일 ‘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을 열어 성폭력 예방과 성의식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피켓 홍보와 성폭력 예방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중요한 여성 인권문제로 인식되는 성매매와 성 산업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에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가 진행한 지역 내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후 더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실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19일 ‘목포 지역 성 산업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 산업 축소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토론회는 불법 수익에 의한 성매매 착취 구조에 대한 발제와 목포 지역 성 산업 실태 조사 보고가 이루어졌고, 성 산업 축소 대안 및 경찰과 지역 사회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들은 여성을 상대로 자행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여성 차별과 폭력 없는 전남을 외치는 여성 선언과 거리 행진 등 시민 캠페인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10. 기타

1) 목포 시내버스 요금 인상 대응

시내버스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반발하고, 시민단체들은 비판한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고,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 가운데 하나이므로 곧바로 서민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원가계산이 투명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정책 실패를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생각은 시내버스 인상에 대해서 더 부정적 태도를 갖게 만들고 있다.

목포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대응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10월 7일 목포시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가 일반버스는 630원, 중고생은 500원, 초등학생 320원, 좌석버스는 1,08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한 시내버스 요금을 신고 수리하고 9일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이는 전라남도 시내버스 평균 요금 인상률보다 6~7%가 높은 것이다. 10월 6일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목포경실련,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예총목포지부, 한국청년연합회목포지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1998년에 일반버스 530원 인상 방안을 시민단체들이 대응하여 30원 인하된 500원으로 낮춰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큰 폭의 요금인상을 하려는 것과 시내버스 경영상의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서비스 개선 노력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 문제를 다룰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2005년 1월에도 시내버스 요금에 관한 논란은 재현된다. 2월 1일부터 목포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 18.5%, 중고생 14.03%, 초등생 11.11%, 좌석버스 10.16% 인상이 결정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 시민연대는 1월 26일 전남도가 매우 졸속적인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실사와 함께 전라남도의원, 목포시의원, 목포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고, 이어서 1월 31일에는 성명을 내어 버스 요금 인상방침을 재고할 것과 목포시의 재정 지원 유보도 촉구하였다.

2008년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목포경실련은 9월 29일 성명을 내어 목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서둘러 도입하지 말고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합리화와 준공영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 낼 것을 촉구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적정 운송원가 보상을 이유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회사 경영 합리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는 데는 이미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보조금 등 수십억 원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목포시가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나 원가 투명성 확보 측면도 소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지방 재정, 공공요금 결정체계, 주요 정책의 사회적 합의 등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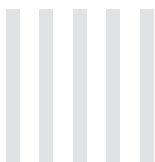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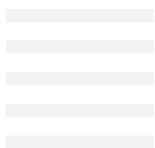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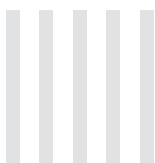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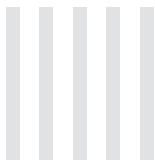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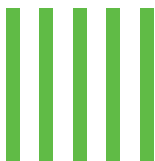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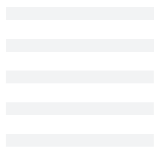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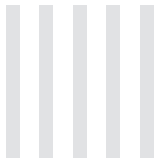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2) 시민 주도 세계범선 목포축제

2002년 목포시가 대회 개최를 포기한 국제 규모 행사를 시민단체들이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다. 2001년 10월 목포시는 '2002년 5월 8일 일본 오키나와 대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목포, 부산, 일본 도쿄를 거쳐 요코하마 대회를 끝으로 6월 30일까지 55일 동안 열릴 예정인 범선대회 기간 중 6월 1일부터 나흘 동안 목포시에서도 축제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목포시와 대회 조직위원회 간에 생겨난 갈등으로 대회 개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목포시가 세계범선대회 유치를 포기하게 되자 목포포럼 주도로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목포 시민연대에서 대회를 포기하면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사게 될 것이라며 시민 주도로 개최할 뜻을 가지고 시민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행사에 필요한 4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700만원을 모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행사 내용은 5월 31일자 목포MBC 보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세계범선대회 목포대회가 오늘 목포해양대학교 부두에서 개막됐습니다. 범선대회 목포대회는 2천 t이 넘는 초대형 범선 러시아 선적 나제다호와 팔라다호, 건조된 지 90년이 넘는 네덜란드 선적 유로파호 등 모두 13척의 범선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선적 알티커툼슨호는 3대가 범선을 물고 와 눈길을 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수선적 코리아나호와 요트 선사인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범선대회 목포대회는 오늘 환영식에 이어 야간 점등, 범선 사진 찍기, 그림그리기 대회 등 4박 5일 동안 열립니다.

당시 행사 개최에 앞장 선 목포포럼은 목포시가 2002년 'SAIL KOREA 2002 세계범선한국대회'의 한국 내 개최지로 신청하여 준비하다가 대회를 고작 20여 일 앞두고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지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목포시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목포시에 수차에 걸쳐 제고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초 '세계범선 목포대회'를 '세계범선 목포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지역 대표축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회를 치르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포기한 행사를 시민단체들의 역량으로 치른 것은 드문 일이다. 이 행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표축제 개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잘 나타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김종익 |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



제1절 1980~1990년대 목포 지역 노동조합의 민주화 투쟁

이권춘 |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제2절 목포 지역 노동운동 단체 민노협 결성

이권춘 |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제3절 목포 지역 노동운동의 현재

이권춘 |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제2장 목포의 노동운동

목포는 항구 도시다. 1897년 10월에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개항하였고, 개항과 함께 해운업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완도, 해남, 신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해상 운송으로 물류를 운반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호남평야가 인접해 있어서 목포의 풍부한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다시 일본의 농작물을 수입할 수 있어서 해운업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짐을 옮기는 부두 노동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개항 이후 근대기까지 부두 하역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항운노조(1959년 5월 대한노총 단일조합 27개 조직, 조합원수 4,667명)가 존재하게 되었다.⁰¹⁾

그러나 1979년 이후 목포항이 지속적으로 기계화 시설을 늘려가자 많은 수의 항만 노동자들은 일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 임금이 다른 업종(특히 제조업)보다 많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사고파는 어용 노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1980년대 항만 노동자들의 노동 쟁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는 제5공화국(1980~1985) 시기에 목포 지역 노동조합의 침체로 이어졌다.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군사 정권은 자본가의 이윤 추구하고 정치 자금 마련 등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법을 개악하였다. 그 골자는 ‘노조의 제3자 개입 금지’와 ‘산별노조 폐지 그리고 기업 단위 조합 체제’로의 전환 등이 중심이 되면서 노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어렵게 하였다.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1981년 5월 15일 한국노총 목포지구협의회가 정식 발족되었다(1985년 4월 기준 9개 산별에 조합수 27개, 조합원수는 9,095명).⁰²⁾

01) 최길상, 「노동과 보건」, 『목포시사』 사회산업편, 목포시사편찬위원회, 1990, 50쪽.

02) 같은 글, 53쪽.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사 편에 서 있었고,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맞선 몇몇 뜻있는 소수 조직이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임금 인상 및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개별적 투쟁을 하였다. 1986~1987년 붓물처럼 터진 민주화 운동의 물결에 따라서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목포 지역 노동운동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택시노동조합·병원노동조합(의료원, 성골롬반병원)·광양기계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및 근로 조건 투쟁을 하였고, 호남고무·요업계통(행남사, 한전자기)·남양어망 등은 소수 노동자 몇 명의 개별적인 단위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산별적 투쟁은 일반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에 임금 인상 및 근로 조건 개선 투쟁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병행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태원여객 등과 같이 산발적이며 비조직적인 투쟁에 그치는 곳도 있었지만, 택시노동조합 투쟁의 경우에는 목포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연대의 차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확산되거나 성과에 만족할 만한 투쟁은 없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제1절 1980~1990년대 목포 지역 노동조합의 민주화 투쟁

1. 남양어망

1) 노동조합 분쟁 사건

목포 남양어망 노조 분쟁은 분쟁의 쟁점이 노동관계 개선이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6개월에 걸쳐 일어난 독특한 노동 분쟁이었다. 전국 섬유노조 산하에 남양어망분회를 1978년 5월 14일 조직하였다. 다음날 남양어망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결성 통보를 하고, 협조를 얻어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를 목포시청 사회과 노정계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접수시켰으나 회사 측의 방해로 설립 신고 서류가 반려되었다. 이후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했으나 전라남도에 전달하지 않고 목포시청이 계속 보류하였다. 이에 전남지부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6월 30일, 드디어 노조 설립 신고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 와중에 1978년 8월 30일 회사 측을 지지하는 노동자 15명이 화학노조 남양어망지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주 산하 섬유노조분회 임직원 약 100명이 매일 버스로 목포 남양어망 회사 정문 앞에서 10월 29일까지 농성하였다. 이러한 6개월간의 투쟁과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어 11월 20일 섬유노조가 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노사 분규는 종결되었다. 회사는 섬유노조 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근로자들을 부산 공장으로 전출시키는 등 단체 조직의 힘을 과시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일삼았다. 남양어망 섬유노조 분회를 둘러싼 노사 간의 분쟁은 재벌을 이길 수 있는 조직의 힘을 보여 주었고, 이는 노동자들의 일치단결된 단합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⁰³⁾

2) 니찌모 완만 부서 투쟁⁰⁴⁾

남양어망 내 완만 부서는 해태 건조기 기계를 생산하는 부서로서 1987년에 생겼다. 1988년 겨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불만을 가진 부서 내 노동자들이 회식 자리에서 뜻을 모아 다음날 임금 인상 요구를 하기로 하고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권춘이 그날 이야기를 정리하고 다른 노동자가 대표로 나서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행동 지침대로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모닥불 주위에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다. 강한 침묵과 긴장이 흘렀다. 부서장과 회사 간부들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노동자 대표로 이야기 할 사람은 오지 않았다. 부서장은 작업 준비는 하지 않고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모닥불이 들어 있는 통을 차버렸다. 노동자들은 얼음장처럼 굳어 버렸고 얼굴은 별칭에 달아올랐다. 부서장의 기세에 눌려 모두 2층 탈의장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올라갔다. 당시 부서장은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옷을 갈아입다 말고 “일할 기분이 나질 않으니 조퇴하자.”라고 누군가 선동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분위기를 감지한 부서장은 노동자들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이러지 말고 너희들은 모두 일을 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대표한 사람이 회사 간부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요구 사항을 말하고 “오늘은 더 이상 일할 기분이 나질 않으니 단체로 조퇴하겠습니다.”고 말하면서 정문을 나섰다. 밖으로 나왔지만 딱히 갈 데가 없는 노동자들은 매섭게 부는 바람에 추위를 달래려 벗짚이 쌓여 있는 눈에 가서 벗짚을 태워가며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회사에서는 요구(임금 인상)를 다 들어 주었고 노동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03) 최길상, 앞의 글, 71쪽.

04) 니찌모란 일본회사명이며, 완만은 해태 건조기란 뜻이다.

3) 공무원서 투쟁

1989년 5월경에 손철주, 이권춘의 주도로 공무 부서(공작부와 니찌모 완만 사업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외치며 공무 부서(약 70~80명) 농성에 들어갔다. 이권춘이 메가폰을 잡고 앞장섰으나 나중에는 설종수(전남대 83학번, '소산호'란 가명으로 입사)가 진행을 하였다. 다른 부서들(결망부, 연사부 등)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문을 모두 닫아 놓고 작업을 하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동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아침부터 집회를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였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노동자들은 회사 간부들의 통제 속에 놓여 있었기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스크랩을 짜고, 식당 앞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두어 사람이 합류하였고, 몇 번 하다 보니 어느새 수백 명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소산호(설종수)가 앞장을 섰다. 노동조합의 비민주적인 처사와 현장에서 부당하게 대우 받은 노동자들의 박탈당한 권리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자 함께한 노동자들은 환호와 함성으로 응답해주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어용노조 집행부 총사퇴와 직선제로 선출 등)과 현장 노동 조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겁에 질리고 놀란 이만석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회사 간부들, 홍순기 회장에게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무리되었다. 안타깝게도 부산 본사에 노동조합 본청이 있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모두 하나가 되어 단결 투쟁을 하면 반드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두 번의 투쟁 이후 목포 지역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새로운 변화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설종수 등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으나 광주 대공과의 방해 공작으로 설종수는 구속되었고 이권춘 등은 부서 이동 후 사퇴하였다.

투쟁의 결과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일깨워 주었으며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또한 노동 인권이 신장되었다. 즉 관리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일방적 지시와 강요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다. 반면에 비조직적·산발적인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남양어망 본사가 부산 공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홍순기 회장과 목포공장 이만석 부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한 몇 가지 약속을 받고도 몇 달이 지난 후 주동자 설종수는 구속, 손철주, 이권춘은 부서 이동을 당하여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2. 호남고무

1) 1978년 노사분규

삼화고무와 아식스(일본) 합자회사인 호남고무 노동조합은 1976년 화학노조 호남고무지부를 결성하였다. 노조원은 약 120명이었으며, 다른 노조와는 달리 회사 임원을 제외한 전원이 가입되었다. 1978년에 회사는 자본금 30억 증자로 인하여 종업원 역시 1,000여 명으로 증가 되었으나 노사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두 차례 걸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제1차는 10월 7일 무단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연기 등 10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집단 농성에 들어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노동청 목포지방사무소의 중재로 사용자 측 부당 노동 행위자에게 200만원의 벌금과 인사 조치 및 시정으로 종결되었다.

제2차는 1980년 초 임금 인상을 위한 직권 조정 신청을 목포 지역 노조지부에 위임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났다. 목포 지역 화학노조지부에 위임한 임금 인상 직권 조정 신청은 전라남도 노조위원회에 접수되어 현 임금의 40%를 인상하라는 노조 역사상 볼 수 없는 조정결정통보를 받았으나 회사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3일간의 2차 쟁의에 들어갔다. 3일간의 쟁의 기간 중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이 회사 주변을 경호까지 하였으며, 근로자들은 경찰의 회사 진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팽이, 삽 등을 준비하고 농성을 하였다. 이에 회사 측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3개월 소급분 임금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쟁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현금을 지급한 후 국보위와 노동청에 전남노동위원회 직권 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22%로 환원조치 하도록 하였다. 이에 화학노조 집행부는 상경하여 노동청에 항의를 하였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위원장이었던 진완식은 관계 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⁰⁵⁾

2) 1988년 투쟁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 호남고무 목포공장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저임금, 높은 이직률, 낮은 근속률, 노동조합의 어용화,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현장이었다.

이에 불만이 쌓인 윤영배(남, 당시 32세)·손영득·김영완·박정수·홍성범 등이 노동대책위원회를 구성

05) 최길상, 앞의 글, 75쪽.

하여 임금 인상과 조합장 직선제 요구를 하며 1988년 4월 12일부터 10일간 파업에 들어갔다. 남성 축구부, 축교동을 중심으로 젊은 친구들, 산업체 특별 학생들 그리고 아줌마 부대 등 400여 명이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농성을 했다. 회사 측에서 ‘자녀 장학금 지급, 보너스(상여금) 지급’ 약속을 하여 해산하였다.

4월 21일에 회사는 농성의 핵심 주동자였던 윤영배와 손영득을 사장이 만나자고 하면서 유인한 뒤 구사대에 납치하여 10여 일 동안 백양사, 담양, 지리산 등에 감금·협박·회유하였다. 이후 노동법 위반 혐의로 13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고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복직 투쟁을 벌였으나 끝내 패소하고 말았다.

1988년 5월에 서울 평민당 중앙 당사에 상경하여 농성을 벌이고 김대중 대표를 면담하기까지 했으나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당시로는 최초로 계획되고 조직된 현장 투쟁이었다.

3. 행남사

1) 1987년 산정공장 투쟁사

식기 생산 업체인 (주)행남사는 1980년대 말 조합원 수가 천여 명이 넘는 서남권 최대 노동조합(한국노총 화학노련)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작업 환경 개선, 복리후생, 임금 구조 개편 및 인상 등 산재되어 있는 현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신장을 위해 앞장서기보다는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행남사는 상대적으로 호남고무나 남양어망보다는 근로기준법을 미약하게나마 준수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1987년 노동자 투쟁은 비껴갈 수 없었다. 노동조합의 민주화(노조위원장 직선제 관철 등)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2일 간의 투쟁이 있었다.

1980년대 행남사의 근로 조건을 살펴보면 여성 노동자들의 일당 2,620원에 야근 수당은 시간당 100원 더 받았고, 남성은 여성 근로자에 비해 1,000원 정도 더 받았다.⁰⁶⁾ 그들의 월급은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당시의 전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밑도는 낮은 금액이었다.

그조차도 재형저축, 의료 보험료, 식대, 노조 활동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조퇴를

06) 『목포대신문』 1986. 09. 20.

할 때는 시간만큼 봉급에서 제외시켰고, 회사에 불만을 토로할 경우 강제로 사표를 내게 하였다.⁰⁷⁾ 특히 후생 복지 문제는 가장 심각하였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게 해주는 건강 진단도 형식에 그치고, 치료약 또한 나오지 않았다.⁰⁸⁾

이러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들불처럼 일어섰던 행남사 산정공장 중심의 투쟁은 다음과 같다. 1987년 행남사 투쟁은 8월 17일 산정공장 등 노동자 1,100여 명이 모여 농성을 벌였고 평균 임금 10.16% 인상 등 4개 항에 합의하고 타결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목포 지역 대부분의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 생산 공장이었기에 단순 노무직이며, 입·퇴사가 용이한 특성 때문에 조직의 결속 및 투쟁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직선제 위원장(유조왕)을 선출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권익에 앞장서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이 현장 이곳저곳에서 쌓여가기 시작하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는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2) 행남사 민주노조 건설위원회(행민추 활동)

1989년 7월경 노동조합의 진정한 민주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권위 보호와 인권 신장을 위하여 뜻 있는 20여 명이 여러 차례 준비 모임을 거쳐 목포민주노동자회 사무실에서 행남사 민주노조 건설추진위원회(약칭 행민추)를 결성하게 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의장으로 고흥권이 당선되었다. 임원진으로는 총무를 1인으로 하고, 공장별로 실무 담당자 2명씩 8명을 본사 및 상동, 석현 및 본차이나, 산정, 5공장의 대표들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9월경에 있을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따른 선거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선대 본부장은 행민추 의장이 겸임하기로 하였다. 본사 포함 전 공장 3분의 2 이상 당선 목표로 공장별 대의원 후보 인선 작업을 하였다. 현장에서 행민추 회원 또는 뜻을 같이하는 지지자들을 후보로 내세웠다.

회사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행민추 후보로 선뜻 나서지 않으려 했지만 행민추의 활동과 투쟁이 노동자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으면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대의원의 3분의 1을 확보하였다. 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이권춘은 상임위원이 되었고 임금 교섭 때 임금 교섭위원이 되기도 하였다. 행남사 본차이나 캐스팅 부서의 경우에 반장과 이권춘 행민추 회원이 대의원선거에 출마했는데, 회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회유가 있었다. 이권춘 및 핵심 지지자들

07) 『목포대신문』 1988. 11. 05.

08) 『목포대신문』 1986. 09. 20.

은 모두 퇴근시키고 나머지 부서원들은 회식하러 갔다. 다음날 투표장에 석현 공장 및 본차이나 공장 부서 임원들 모두 투·개표에 관심이 집중되어 모두 모여 개표 결과 지켜보고 있었다. 결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권춘이 당선되었다. 이후 회사의 방해 공작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몰표가 나온 이권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행민추는 사내 활동뿐만 아니라 일일찾집(1989년 12월)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불우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1990년 봄에 있을 임금 협상 및 단체 교섭을 앞두고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소속 부서 대의원과 현장 조합원과의 휴식 시간을 통한 간담회 적극 활용)하였다. 가장 먼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여금 또한 차등 지급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민주노동조합 건설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임금 협상 등 교섭 시한이 다가오자 노동조합은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단체 교섭 위원 중 행민추 소속 2명을 선출하였다. 이후 1990년 3~4월 임금 협상 및 10여 차례가 넘는 교섭을 통해 행민추 안을 다수 교섭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인준을 앞두고 행민추의 임금 인상안이 관철되기를 원하며 새벽까지 대의원 회의를 가졌지만, 투표 결과 늘 행민추 안이 부결되므로 투표가 무슨 소용 있느냐며, 석현공장 오종희 부위원장은 투표함을 발로 밟아 버렸다. 이후 뜻이 관철되지 않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뜻에 부합하게 결정된 것에 항의하며 석현 및 본차이나 공장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100여 명의 행민추 회원 등이 집회를 가졌고, 집회 참가 후 방송국에 알리기 위하여 MBC 가두행진을 하였다.

한편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은주와 박인애가 중심이 되어 행민추 노동자에게 교육을 시켰다. 1990년 3월 말경 목포 민주노동자협의회(민노협) 회원인 박관주, 이권춘 외 몇 명이 1989년 8~9월 의식화 교육을 시킨 혐의로 광주 도경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박관주가 구속되었다. 박관주는 이후 1년 여의 교도 생활을 마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회사와 광주 대공분실은 행민추를 주시하였고 마침내, 1990년 4월 28일 아침 대부분의 회원들은 출근길에 연행되었고, 일부는 회사 안에서 연행되었다. 또한 집집마다 압수 수색을 하여 행민추 회원 10여 명이 연행되었다. 대공분실 조사실에는 칸마다 이름이 적혀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된 사람은 독방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연행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고희권, 박인애, 이은주, 이권춘, 김광준, 정일, 김형욱, 오종희, 배희욱, 이기형, 이상 10명이었다. 3일 동안 밤낮없이 조사를 마치고 고희권, 박인애, 이은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수사로 결정이 나 풀려났다. 몇 차례 검찰의 소환을 통해 구속 기소된 3명의 구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를 했다. 그 이후 회사는 고형권, 박인애, 이은주, 이기형을 해고시켰고, 이권춘, 정일, 오점심, 김순자 등은 부서 이동이 있었다. 대공분실 연행 당시 현장에 남아 있었던 행민추 회원 중 정희아, 김양례, 박명희, 손미경, 김순자, 오점심, 오영길, 정미정, 정승기 등이 주체가 되어 계속적인 집회와 석방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 또한 집회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참하였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핵심 인물의 구속으로 행민추 조직의 와해를 기대했던 회사와 경찰은 예상을 뒤엎는 현실을 맞아야 했다. 행민추는 정기 총회(1990년 5월)를 통해 이권춘을 제2기 의장으로 선출하고 더 든든한 조직으로 세워 나갔다.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1999년 9월~10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는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따라 선대위가 출범(1990년 6월)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위원장 후보로 행민추 의장인 이권춘을 후보로 확정했다. 회사는 1990년 7월 행민추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행민추를 지지하는 회원을 다른 공장 및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4달 후인 1990년 10월경 노동 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4명의 후보가 나왔고, 1차 선거 결과 2등 이연성과 150표 이상 표 차이에도 과반을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3일 후 2차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회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서장이 불러서 다짜고짜 “왜 이권춘이를 찍었냐. 회사 문 닫으려냐.” 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노동자 한 사람이 이권춘을 찾아와 울먹이면서 “애들 학교는 마쳐야 해서 회사가 문 닫는다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서장과 반장, 조장들은 행민추 지지자들과 투표 전날 술을 마시고 회유를 해서 다음날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측의 방해 공작 때문에 이권춘은 5표 차의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었다. 이후 선거 무효 확인소송을 벌였으나 중도 포기하였다. 사측의 행민추 조직 와해 작업이 진행되면서 소속 회원은 해고되거나 타 공장 타 부서로 이직되었다.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다섯 개의 공장으로 분산되어 있어 산정공장, 석현 및 본차이나 공장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행민추 조직이 약한 본사나 5공장은 영향력이 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두 번째 패배 원인으로는 사측의 방해 및 개입이 있었다. 1991년 1월 초 행민추 소속 해고자의 해고 무효 소송 및 야당 중앙 당사(평화민주당) 서울 상경 투쟁도 있었다. 그 이후 조직의 약화로 인하여 행민추의 영향력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위원장 선거 며칠 후 부지부장선거에서는 2명을 당선시키는 패거리를 거두었다(산정공장 신현순, 석현공장 오종희). 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지지와 부위원장 선거는 행민추의 절반의 성공이자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모습 속에서 노동조합 측의 유리한 단체 교섭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 결에 더 가까이 다가서며 노동자 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행민추에서 매월 발

간한 『월간 민주노보』를 소개한다. 『민주노보』가 처음 발행된 시기는 1989년 4월 28일 제1호로, 주된 내용은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주제 아래 행민추 발족을 알리고, 어용노조의 진상을 폭로하였으며, 민주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라는 내용이었다.

현장에서 처음 받아 본 『민주노보』 때문에 사측과 노조 집행부 측에서는 긴장을 했고, 반면 노동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다음 호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계속된 『민주노보』는 어느새 제5호(1989년 5월 29일)를 발행하게 되었다. 제5호에는 임금 인상 투쟁 과정에서 제기된 임원 불신임 찬반 투표에 관한 내용 등이 실려 있었다. 행민추는 5월 1일 임시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당월 22일 집행부에서는 임시 총회 소집을 거부한다는 공문을 행민추에 전달하였다. 23일에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행민추 임원이 회합을 가졌다. 그 내용은 첫째, 서로의 입장을 겸허하게 반성하며, 둘째는 현 집행부는 조합원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행민추가 노조 기관지 『함성』 및 조합원과 대의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행민추는 지금까지의 투쟁을 진행해 오면서 위원장 및 상임 간부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과 인격 모독이 있었다면 이 지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어 『민주노보』 제6호(1989년 8월 5일)에는 수출 감소로 석현공장 조합원 40여 명을 타 공장으 로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를 방관하는 노조를 비판했다. 지난 3월 임금 인상과 관련된 회사의 보복조치를 보았다.”는 내용이 실렸다. 두 번째 내용은 상여금 및 근태 감액에 대하여 언급했다. 단체 협약 내에 근태 감액 등 급료 감급 제재 규정이 없는데도 개인별로 80~120% 차등 지급함으로 인하여 개개인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상여금에 대한 감급 제재 규정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한 예로 행민추 회원 및 적극 지지자들에게는 상여금을 80%를 지급하고, 회사에 협조하는 사원에게는 120%를 차등 지급해서 노동자들을 통제 의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편을 갈라놓는 결과도 낳았다.

이와 같이 『민주노보』는 민주화를 촉구하며 조합원들의 교육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4. 택시노조

1985년도에 택시업체인 유한회사 영진기업 조합원 19명이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1985년 4월 4일 노동조합장 편승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체 분류와 사납금 강요의 시정을 요구하는 분류였다. 이는 사업주의 주동자 고소로 관계법에 의해 처리되었다. 사납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

되어 쟁의는 종결되었다. 이외에도 중앙교통과 우진택시, 상무택시에서 사납금 강요에 따른 쟁의가 있었으나 노사 합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되었다.⁰⁹⁾

한편 남도택시는 1985년 9월 24일 사납금 강요와 근로자 폭행으로 쟁의가 있었다.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를 고발하여 관계법에 의해 의법 처리됨으로 분쟁은 마무리되었다. 1987년 6월 11일 목포 택시 기사들은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 노조사무실 옥상에서 각 단위 노조 임원진 24명이 ‘근로 조건 개선하자, 사용자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철야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12일 오후 2시 백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집결, 쫓기 대회를 갖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용자 측이 피해액을 부담할 것과 월급제 실시를 요구한 뒤에 35개의 택시에 2~3명씩 분승하여 경적과 폭발음을 내며 차량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이들에게 박수를 치며 지지를 표시하였고, 이들은 시청 앞에서 전경에 의해 모두 64명이 연행되었다가 2시간 후에 석방되었다. 목포 택시노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주적, 선도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투쟁 이후 1985~1986년에 200여 명의 조합원 중 120여 명의 조합원이 강제 해고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택시노조는 회사에 대한 민주노조 설립을 위한 끊임없는 내부적 투쟁을 하면서 성장해 나갔다.¹⁰⁾

1988년 2월 29일 사용자 측과의 임금 협상을 시작하여 8시간 근무에 기본급 25만 원, 시간급 인상, 2시간 잔업수당을 포함 월 평균 35만 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1, 2차 교섭에 실패하고 이후 끈질긴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되었기는 하나 사용자 측은 타결된 협상안을 지키지 않고 교섭 대표 8인의 교섭 기간 중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부당 노동행위)고 주장하였다. 또 노조원들이 사용자 대표를 협상 과정 중에 불법 감금했다 하여 고발 조치하고, 3월 29일 협상안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분노한 택시 조합원과 대표들은 투쟁을 결의하고 1차로 4월 1일부터 교섭 대표 8인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용자 측은 4월 5일 노동부 목포지방사무소에서 협상을 재개하여 교섭기간 중의 대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이 취소와 원래의 임금 협상안을 거부해 협상은 다시 결렬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임금 인상 투쟁이 그 성과를 얻고 있었던 터라, 목포 택시노조 역시 임금 인상을 꾸준히 투쟁하여 결국 1988년 11월에는 월급 27만 원으로 인상을 이루어냈다. 또한 목포의 택시 기사들은 준법 운행 투쟁(종전의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운행)을 하여 노동시간 단축도 이루어냈다. 택

09) 최길상, 앞의 글, 75쪽.

10) 김자룡, 「목포 노동운동의 성장과 한계」, 『목포와 민중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학생 심포지엄 자료집),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2008, 113쪽.

시 노동자들은 근로 조건 개선을 쟁취하는 데 있어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의식화를 위하여 독서 모임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1991년 목포의 택시 노동자들은 대규모 노동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¹¹⁾

5. 태원여객

1984년 태원여객 안내양 60여 명이 수입금 강요, 근로 복지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1일간 승차 거부를 하는 노동쟁의가 있었으나 사업주와 즉시 원만히 타결하였다.¹²⁾

1990년대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과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해 소수 운전기사들(이영종, 조행연, 송명규, 박충진, 조문호, 김지천 등)이 산발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회사의 방해 공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제2절 목포 지역 노동운동 단체 민노협 결성

호남고무 해고자들은 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목포 지역 해고자를 중심으로 1988년 6월에 해노협(해고노동자복지협의회)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1988년 10월경에는 노동운동 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호남고무, 남양어망, 행남사, 한전자기 등 노동자들이 목포 지역 노동 운동의 한 획을 긋게 된 민주노동자협의회(민노협)를 창립케 되었다.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는 손영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회원으로는 손영득, 이은경, 이재신, 박경순, 박숙월, 한기봉, 현영철, 이용우, 박정수, 홍성범, 김관주, 황정아, 이권춘, 고희권, 이은주, 박인애, 정희아, 최영미, 최유란, 김경호, 김병주, 김선택, 김영완, 김인석, 노영옥, 송정미, 오선호, 윤만식, 윤호식, 이광열, 장인숙, 정홍조, 최순재, 이성근, 김형욱, 박경호 등이었다. 지도 위원은 태원여객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이영종, 조행연, 송명규, 박충진, 조문호, 김지천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이후에도 이영종, 이권춘, 정희아 등이 대표로 활동했다. 주요 조직 사업으로는 회원 모집, 상담 활동, 노동조합 지원 사업,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초창기 주요 사업은 노동법 개정이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노동법 개정 투쟁에 전념하였다. 1991년 11월 1일(금)부터 시작된 초청 강연회는 한경남 전국노동단체연합 공동의장이 강사로 초대

11) 최길상, 앞의 글, 71쪽.

12) 같은 글, 75쪽.

되어 가톨릭회관 2층 대강당에서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가량 1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연회를 마치고 민노협 깃발과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임을 위한 행진곡」, 「민주노총가」, 「동지가」 등을 부르며, 메가폰을 든 손영득이 '노동악법 개악 포기 하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하였다. 가톨릭회관에서 출발한 가두행렬은 3호광장, 2호광장, 1호광장을 지나 역전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진 후 해산하였다.

그리고 11월 3일(일)에는 노동악법 저지를 위한 목포 지역 노동자 등반 대회를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하였다. 또한 11월 7일(목)에 좋은 영화 상영회를 통하여 노동자의 단결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연이어 11월 8일(금)에도 노동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톨릭회관에서 개최하면서 연관 단체와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았다. 마지막으로 11월 13일(수)에는 노동법 개정 투쟁 및 전태일 추모제 그리고 노동자 문화제를 목포대 송림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법 개정 투쟁을 계기로 목포 지역 노동자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였으며,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정기간행물인 『목포노동자신문』을 발간하여 각 사업장 및 목포 시내 전역에 배포하였으며,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를 소개하고 노동자들의 현안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분야를 다루었다. 한 예로 1991년 10월 28일에 발행한 제7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먼저 1면을 보면 제조업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노동을 다루었고, 2면에는 '야권 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3면은 노동법 개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자는 내용이었다. 4면 또한 「ilter 건강 - 환절기 감기 -」 등을 게재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이 행복의 첫째 조건임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 노동조합, 목포의료원 노동조합, 광양기계 노동조합 등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사항을 알림으로써 사측에게는 압박을, 노동조합 측에게는 분위기 조성에 유리한 측면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물리치료사 노조 설립에 관한 소식은 새로운 형태인 전문 분야의 노동조합 건설의 좋은 선례로 남게 되었다. 이는 설립 과정의 서술로써 목포 지역 내 병·의원의 물리치료사 노동조합(위원장 김온갑)이 10월 14일 설립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택시 노조의 끈질길 투쟁 소식도 전하는 것으로 『목포노동자신문』은 계속되었다. 그 외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노동절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갔다.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도 매년 참가하여 전국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를 같이하여 깃발을 높이 휘날렸다.

한편 목포권 민주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투쟁 지원 및 지지를 하였다. 1989년부터 1990년대까지 광양 노조, 성골로반 노조, 목포의료원 노조, 한전자기·코스모스·행남사·택시 총파업·태원여객 등 투쟁 지원 및 노동 상담 활동 등을 하였다. 그것은 수많은 목포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신장, 어용노조에 대항하는 민주노동조합 및 민주노조 지원 사업 등이었다. 또한 이 지역의 최대 조직인 목민협과 함께 투쟁의 대열을 걸었다.

한편,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1993년 2월에 김영삼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투쟁의 명분이 약해졌을 때 한라중공업(현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노동 단체(새날노동자회, Y야학, 밀알야학, 노동 상담소)가 민주노총 소속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견인할 수 없었으며, 목포 지역 노동운동도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 이에 통합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1994년 초부터 시작된 논의가 결실을 맺어 1996년 노동운동단체가 통합되었고 민노협의 깃발은 내려졌다. 이후 5개 노동 단체의 연합체인 목포민주노동지회가 4년간 활동을 하다가 막을 내리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3절 목포 지역 노동운동의 현재

개항 초기부터 목포 지역은 항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항운 노동조합 및 투쟁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기계화로 인한 인력 감소로 노동조합은 일자리를 사고파는 어용노조로 전락하였다. 이는 목포 지역 노동운동의 침체기로 이어진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목포에서는 이렇다 할 노동조합운동 및 노동운동은 없어 보였다. 그 외 향토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쟁에서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이익과 권익을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회사의 편에 서 있는 어용단체가 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의식 있는 노동자들은 회사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고, 한편으로는 어용노조와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악법과 국가 권력을 앞세워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특히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는 신군부의 통제 아래 더욱 많은 이윤을 낳게 되어 가는 반면, 노동자들은 권력의 힘에 억눌려 저임금과 불합리한 근로 조건 때문에 삶이 더욱 피폐해져 갔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대한 자본 세력과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했다. 이렇다보니 노동조합은 어용화되어 제구실을 못하였고, 사측에 귀속되어 사측의 대변자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참다못한 소수 노동자의 투쟁은 있었지만, 주도했던 세력들은 회사의 탄압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현장을 떠나야 했다.

이러는 가운데 목포 지역은 1970~1980년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노동자의 의식 또한 미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0~1980년대 목포 지역 노동운동은 전반적으로 침체기였다. 이 결과 1986년 민주화 요구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호기에도 목포를 대표할만한 민주노조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영향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4월 9개 산별에 노동조합 27개, 조합원수는 9,095명이었다. 당시에 목포의 노동자 대부분이 소속되어있는 한국노총 목포지역협의회는 노동조합 강화조치의 핵심기구로 이미 국가 권력에 잠식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목포의 노동 운동은 민주노조를 세울 수 없는 상황에도 각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소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노동단체 민주노동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계속되었다.

한편,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목포 지역 노동 환경은 열악하였다. 대부분 노동집약적 영세 산업인 제조업 공장이었으며, 단순 작업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과 낮은 임금 등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 또한 결속력, 단결력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회사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어용노조로써 사용자측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노동자 대투쟁 또한 목포 지역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영향력 밖에 있었다.

그럼에도 몇 군데 사업장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별적·산발적 투쟁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투쟁 이후 회사의 탄압과 와해 공작으로 대부분 조직이 해체되었다. 그리고 투쟁의 중심에 서있던 핵심 주도 세력들의 구속, 해고, 부서 이동 등 조직력 약화로 이어졌다. 치열하게 투쟁했던 코스모스전자와 성골롬반병원 그리고 호남고무 등 사업장은 폐쇄되었고, 향토 기업인 행남사는 여주로 이전, 남양어망은 폐업되었으며, 김 공장만 남았다. 그리고 택시노조는 몇 개의 사업장이 연합하여 가장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던 사례로 남았다.

노동 운동의 침체와 제 역할을 찾지 못하며 목포에서는 유일한 노동 운동 단체인 목포민주노동자 회마저 2000년도에 들어서서 해체되었다. 이후 한국노총과 비교가 되는 민주노총에서 현대삼호중공업과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한 목포지부를 조직하였다.

지금까지 목포 지역은 노동집약적이며,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회사 중심의 소규모 공장이 주를 이루었기에 1990년대는 목포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조선업 중심의 공장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선업의 경기 흐름에 따라 목포 지역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양산단을 비롯하여 목포 지역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이 들어서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목포 노동 운동 역사

1898년 ~ 1903년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부두노동운동(7회).

1920년대 목포에 첫 노동조합 조직.

1925년 목포면업 노동조합 결성.
 1925년 12월 9일 목포자유노조 동맹파업.
 1926년 1월 23일 목포제유 70여 일 파업.
 1926년 3월 21일 목포방직조합의 직포공 동맹파업.
 1947년 대한노총 목포지구연맹 준비위원회 구성.
 1958년 5월 대한노총 목포지구연맹 결성.
 1961년 8월 30일 전국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연맹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탄생.
 1961년 10월 전국부두노동조합 목포지부 재건.
 1981년 5월 15일 한국노총 목포지구협의회 정식 발족.

호남고무

1976년 호남고무 노동조합이 화학노조 호남고무지부를 결성.
 1978년 10월 7일 호남고무 1차 투쟁 발생.
 1980년 초 3일간의 2차 호남고무 투쟁 발생.
 1988년 4월 12일 10일간 호남고무 파업.

남양어망

1978년 5월 14일 전국섬유노조 산하에 남양어망분회 조직.
 1988년 2월 남양어망 니찌모 완만 부서 노사분규.
 1989년 5월 남양어망 공무 부서 투쟁.

행남사

1989년 8월 17일 행남사 산정공장 중심으로 파업.
 1989년 7월경 행남사 민주노조 건설추진위원회(행민추)결성.
 1990년 4월 28일 행민추 간부 10여 명 전남도경에 연행(3명 구속).

택시

- 1985년 4월 4일 택시업체인 유한회사 영진기업 조합원 19명 집단농성.
1985년 9월 24일 수입금 강요와 근로자 폭행으로 남도택시 쟁의.
1987년 6월 11일 목포 택시 기사들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농성.
1987년 6월 12일 오후 2시 백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집결, 궐기대회 후 35개의 택시에 2~3명씩 분승하여 경적과 폭발음을 내며 차량시위(64명 연행 후 2시간 만에 석방).
1985년~1986년 200여 명의 조합원 중 120여 명의 조합원이 강제 해고당함.
1988년 2월 29일 사용자 측과의 임금협상을 시작, 6개월간의 협상 끝에 월급 27만원으로 인상, 종전의 10시간에서 8시간 단축운행 등 협상 타결.

태원여객

- 1984년 태원여객 안내양 파업.
1990년 소수 운전기사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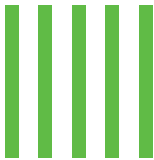
호남제분

- 1987년 9월 3일 호남제분 비노조원 중심으로 분규 일으킴.

코스모스

- 1991년 4월 8일 코스모스 노동자 농성.
1988년 10월경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결성(민노협).
1996년 9월경 목포 지역 노동운동 단체연합회 해체(민노협, 노동상담소, 새날노동자회, 밀알야학, Y야학).
1996년 목포민주노동자회 결성.

이권춘 |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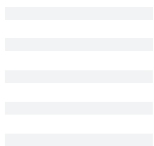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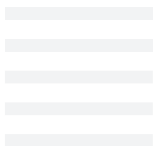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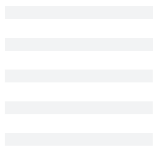


제1절 신문

장용기 | 목포MBC 편성제작부 부국장

제2절 방송

장용기 | 목포MBC 편성제작부 부국장



제3장 목포의 언론

제1절 신문

1. 목포 언론의 태동기: 『목포신보』에서 해방까지(1899~1945)

목포는 호남에서 신문사가 제일 먼저 생긴 곳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부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이다. 『목포신보』는 1899년 6월 16일 일본인 야마모토 이와요시[山本岩吉]에 의해 일본어판으로 발행된 목포 최초의 신문으로 기록된다. 신문 제호를 ‘목포’라는 지명 이름을 삼은 데는 목포항이 1897년 10월 개항됐기 때문에 목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당시만 해도 목포라는 지명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등 생소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목포신보』의 후원은 주로 목포에서 활동을 하는 일본 상인 거류민단의 재력이 후원회의 역할이 컸다.

이어 1919년 목포신보 야마노[山野] 사장은 당시 경영난을 겪던 광주 『광주일보』를 매입해 ‘주식회사 목포신보·광주일보’로 명칭을 바꾸고 신문 발행사 이름도 목포인쇄주식회사를 전남인쇄주식회사로 바꾸었다. 1941년 언론 탄압에 나선 조선총독부는 칙령 제37호인 「신문지 등 게재 금지령」 공포로(1980년 제5공화국 시절 「정기간행물 등록법」 1도 1사제와 비슷함) 『목포신보』와 『광주일보』를 강제 폐간하고 1942년 『전남신보』를 새로 창간했다. 『전남신보』는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목포에는 해방되기까지 목포신보 사옥과 시설만 남았을 뿐 신문은 발행되지 못했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목포신보』도 그해 8월 자동 폐간되었다.

1900년 9월 일본인 기자 치바 다네노리[千葉胤利]에 의해 등사판으로 『양자신문(兩字新聞)』이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설난과 재정난을 겪으면서 몇 개월 뒤 폐간됐다. 치바 기자는 『목포신보』 창간 당시 야마모토 사장이 일본에서 초빙해 온 언론인으로서 목포에서 활약한 내외국인을 망라해

첫 기자가 되는 셈이다. 또 1910년 4월 『전남신문』이란 제호로 일본어판 신문이 발행됐으나 창간 몇 개월 만에 자진 폐간했다.

2. 목포언론의 성장기: 해방 이후부터 군부독재의 종언(1945~1987)

손수검은 해방 후 목포에서 처음으로 신문을 발간한 한국인으로 기록된다. 손수검은 일제 강점기 말기 『경성일보』 목포주재 특파원으로 근무한 지방 언론인이었다. 해방 직후 폐간된 『목포신보』를 인수해 1945년 10월 19일 속간호를 발행한다. 1946년 문재철과 김철진, 강대석 등 일부 유지가 중심이 돼 손수검으로부터 판권을 인수하고 사옥을 목포시 상락동 2가(현 백제관광호텔 앞) 당시 목재상회 건물로 이전하고 그해 8월 1일자부터 신문 이름을 『목포일보』로 바꾸어 발행한다. 『목포신보』의 후신 『목포일보』, 그리고 『목포일보』의 후신인 『호남매일』신문이 1973년 5월 31일자로 폐간되면서 지령 12777호를 간직한 것도 해방 직후 발행된 『목포신보』가 속간호를 내면서 지령까지도 계승했던 까닭에 있다.

1) 『목포일보』(『호남매일』신문)

『목포신보』 판권을 인수해 1946년 8월 『목포일보』로 제호를 바꿔 발간에 나섰다. 『목포일보』는 1952년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지기까지 재정난 등으로 사장이 김대중 등 네 사람이나 바뀌며 회생에 노력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목포에서 호남정미소를 운영하던 김문옥이 인수해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면서 인쇄 시설 개선과 충실한 신문 내용 등 비약적인 발전을 보기 시작했다.

1965년 1월 1일부터 신문의 광역화를 내세워 『목포일보』의 제호를 『호남매일』로 바꾸고 지역 사회와 지역 문화 발전 등 대외적인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김문옥 사장이 타계하면서 사세가 기울기 시작해 정치적인 압력과 신문사 양도 등 정치, 경제적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1973년 5월 31일 『호남매일』은 자진 폐간하고 말았다. 그 뒤로 목포에서는 『호남매일』을 대신할 일간지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

2) 『전남민보』

『전남민보』는 1946년 김백동을 발행인으로 『목포신문』이라는 제호로 창간했으나 곧 『전남민보』로 제호를 바꿔 발행했다. 좌익계 신문으로 비판받으면서 미군정으로부터 태평양방면 포고령 제1호에 의해 무기 정간 처분되자 자진 폐간했다.

3) 『목포매일신문』

『목포매일신문』은 1960년 7월 1일 창간했고 발행인은 이중호이다. 『목포매일신문』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개정 헌법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록제 실시로 군정 법령 제88호가 폐기됨으로써 창간하게 됐다. 조간과 석간으로 매일 2차례 발행됐으나 1961년 5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11호 언론기관 정비 계획에 따라 시설 미비로 그 해 5월 23일자로 폐간됐다.

4) 『호남신문』

『호남신문』은 1956년 조희관이 발행한 『주간향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주간향도』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언론 사업에 관심이 많은 김충신에게 87만 환에 양도된다. 『주간향도』를 인수한 김충신은 제호를 『향도주보』로 바꾸고 인쇄시설을 갖춘 사옥까지 마련했으나 1961년 5월 2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포고령 제11호 시설 미비를 이유로 『향도주보』를 폐간 처분했다.

그로부터 3년 뒤 1964년 김충신은 특수지인 『신한경제신보』를 창간해 1980년 11월 30일 전국 언론사 통폐합 여파로 다시 폐간 될 때까지 17년 동안 2절지 4면의 신문을 꾸준히 발행하는 초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충신은 1987년 6·29 선언으로 언론 자율화가 이루어지자 다시 신문 발간에 착수해 1988년 8월 15일 『향도경제신보』로 복간 허가를 받아 주 2차례 발간하였다. 1989년부터는 인쇄제판시설까지 갖추고 주간지 『호남신문』을 발행하였다.

3. 목포 언론의 도약기: 언론 자유 확대와 지역 언론의 도약(1987~1997)

1987년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군부 독재 권위주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새로운 시대의 태동을 알리는 해로 기록된다. 1987년 6월 시민 항쟁의 결과는 특히 언론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987년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이 제정되면서 제5공화국 시절 1개 광역 시도에 1개 지역 신문 외에는 발간을 금지했던 ‘1도 1사제’라는 법적 제약에 묶여 지역 신문을 발행할 수 없었던 지역의 재계와 언론계 인사를 중심으로 신문 창간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해이다.

1986년 전라남도에서 광역시도로 따로 분리됐던 광주·전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 구 『전남일보』와 구 『전남매일신문』이 강제로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기존의 『광주일보』 외에

도 1988~1989년 발행된 신문을 보면 『무등일보』(1988년 10월) 『전남일보』(1989년 1월) 『전남매일』(1989년 6월) 등 세 개의 지역 일간지가 창간했다. 이어 2~6년 뒤에는 『광주매일』(1991년 11월)과 『광남일보』(1995년 12월)가 추가 창간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광주·전남에서는 6개의 지역 일간지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언론 지형 구도로 짜이게 된다. 1987년 8월 지역주재기자 제도가 부활되면서 이처럼 늘어난 신문을 토대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도 주재기자들이 시·군청 등 시군 유관기관을 출입하며 활발한 취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신문 시장도 양적 질적 확대를 가져온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목포에서 발간하는 신문사가 창간돼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일면서 『주간 목포신문』이 탄생했다. 『주간 목포신문』은 1990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주간 신문으로 발행하였다. 시사정론지를 표방하면서 창간된 『주간 목포신문』은 폐간되는 2006년까지 15년 동안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지역 신문시장에서 광고만 게재하는 정보지 신문이 창간해 자리를 잡게 된다. 1995~1998년 『유달 교차로』, 『유달정보』, 『목포사랑방』, 『목포 베풀시장』 등이 창간 또는 목포지사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은 순수하게 광고 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주력했다.

특히 1994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정치적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선거로 지역 신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목포에서 1994년 35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면서 넘쳐나는 유권자의 요구를 지역 주간 신문인 『주간 목포신문』이 후보자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 신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된다.

지방선거를 겪으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신문 발행의 필요성이 늘면서 창간되는 지방 신문이 늘어난다. 1996년 『목포저널』, 1997년 『신안군민신문』, 1998년 『주간 목포광역신문』 등이 창간했지만 경영난으로 2~3년 내에 폐간하게 된다.

4. 목포 언론의 지형변화: IMF 경제위기와 언론의 경쟁 구도(1998~2004)

1997년 말 한국 사회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사회 구석구석에 부도와 구조조정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오면서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 악순환과 명예퇴직이라는 칼바람을 맞게 되었다. 흑자 도산이라는 말이 나돌고 종신 고용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을 맞으면서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언론사의 감원 바람 속에서도 광주·전남에서 일간지를 발행하는 지방 언론사는 6개사에서 10개사로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창기 광주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일간지들이 창간됐지만 IMF로 인해 대부분의 일간 신문사가 경영난을 겪게 된다. 일간 신문사별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신문사 종사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방 도시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문 시장이 창출되었다.

목포 지역은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 광주를 중심으로 발행되는 전통적 일간 신문사 소속의 주재기자와 신규로 창간된 일간 신문사 소속 주재기자들의 알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 주재기자들은 목포시청 등 자치단체 기자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지역 여론을 독점했으며 지속하려 했다. 이에 반해 신규 창간된 일간지 소속 주재기자들은 새로운 집단화를 이루고 이들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병존하려 했다. 당시 목포시에는 전통적 주재기자를 중심으로 한 기자실 등 3~4개의 기자 모임이 운영됐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중앙신문들이 IMF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목포 상주기자제를 폐쇄했고, 『한국일보』 단 한 곳만이 목포권에 기자를 상주시켰다. 이처럼 중앙 일간지 주재기자제가 폐쇄되면서 지역 내 신문기자의 질적 하향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기자실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운동이 벌어졌다. 목포 지역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중심으로 기자실을 폐쇄했다. 이는 그동안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음성적으로 지불되던 계도지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지역 주재기자들이 경영난으로 도산 또는 취재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고 기자실 운영 또한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었다. 주재기자 중심의 독선적으로 운영되던 기자실 폐쇄와 계도지 예산 삭감으로 다양한 매체의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이 기간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주간 신문이 양적, 질적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동안 『주간 목포신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역 주간 신문 시장은 1999년 『목포투데이』를 시작으로 2000년 『목포내일신문』, 2001년 『목포 21』, 2002년 『향도신문』, 2004년 『호남뉴스라인』, 2006년 『목포시민신문』 등이 창간했다.

다변화된 신문 시장의 욕구에 의해 창간했지만 이들 신문은 대부분 경영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열악한 언론 환경에 내몰리게 된다. 『목포내일신문』은 3년 후인 2003년 발행을 중단하고, 『목포 21』은 2003년에 실질적으로 발행을 중단한다. 『향도신문』은 2004년 이후 경영난으로 한 달에 1회 정도 간헐적으로 발행, 『호남뉴스라인』 또한 1년 후 발행을 중단하고 2006년 폐간하였다.

이때 2000년 목포 지역에서 일간지 신문인 『목포일보』가 창간했다. 『목포일보』는 1946년 발행된 『목포일보』의 명맥을 잇겠다고 창간했지만 2년 후 발행을 멈추었다. 발행을 멈추게 된 원인으로는 경영난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6년 더 이상 발행을 하지 못하였고 폐간 신고를 하였다.

1990년 목포 시민의 성금으로 창간된 『주간 목포신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영난을 겪기 시작

했다. 2000년 들어 『주간 목포신문』은 대대적인 경영혁신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로 경영진을 꾸리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런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간 목포신문』은 지속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2005년 발행을 멈추었다. 이후 2006년 폐간을 신고함으로써 목포 시민 성금으로 창간된 신문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 시기에 언론 시장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인터넷 신문 시장의 확장이었다. 목포 지역 또한 거대한 언론 시장의 변화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특이할만한 점은 인터넷 뉴스의 등장으로, 언론계 지각변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종이 신문, 이른바 보는 언론에서 독자가 참여하는 쌍방향 포털 뉴스로 이뤄지는 시점도 바로 이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 소자본으로 '1인 미디어'가 설립되는 등 본격적인 인터넷 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된다.

2000년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창간되면서 지역 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취재현장을 누비기 시작했다. 이들의 취재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자리매김한 주재기자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기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였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은 현장에서 익힌 취재기법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1인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게 된다. 이 때 『인터넷 전남뉴스』, 『인터넷 신문 우리힘 닷컴』 등이 창간되면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전국에 지역 뉴스를 전했다. 지역 중심의 '1인 인터넷 신문' 외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민영 통신사들의 창간으로 지역 내 기자들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된다.

지역에서는 『연합통신』 중심의 뉴스 공급에서 벗어나 『뉴시스』 등 민영 통신사들이 생기면서 폭넓은 지역 뉴스의 공급 시대가 열렸다.

5. 변환점에 선 목포 언론: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퇴조(2004~2015)

인터넷 발달과 함께 언론 매체의 다변화는 전국은 물론 지역 언론 환경까지 영향을 미쳤다. 과거 소수 지역 유력 인사들만의 특권으로 여겨진 언론인이 다양한 매체에 따라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수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 목포시청에 출입을 등록한 기자 수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6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출입 기자가 10여 명 남짓했으나 지역 주간지와 환경 특수지, 인터넷 언론 등이 점차 늘기 시작해 2005년도에는 50~60명에 달했다. 그리고 2013년 98명이던 출입 기자가 2016년에는 162명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외형적인 수적 증가가 지역 의제의 다양성과 지역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다. 지역 언론이 자기만의 고유 색깔이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의제 설정 기능에

서도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방 정부의 감시와 견제, 언론의 사회적 책무, 지역의 강점을 살리려는 공통적 관심인 의제 설정과 지역성과 공공성, 심층성에 기반한 대안 제시나 비판보다는 언론사의 이해 여부에 따라 사안을 판단해 시민들은 정보의 홍수에 갇혀 오히려 혼선에 빠트리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2005년 5월 전남도청의 남악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역 언론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 또한 기자의 양적 팽창만 부채질 했을 뿐 기자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 전남도 출입기자들이 대부분 광주에 본사를 둔 일간지 소속으로 채워지면서 지역 출신 신문기자들은 한 단계 높은 기사 취재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대부분 일간지 신문사들은 전남도청의 여론을 독점하면서 지역신문의 목포 중심 의제 설정 기능이 소멸됐다.

목포 지역 자생 주간지 신문사들이 경영난으로 창간과 폐간을 반복하면서 지역 언론 환경은 더욱 척박해졌다. 1990년 목포시 시민 성금으로 창간된 『주간 목포신문』이 폐간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2006년 처음으로 지역 신문사(일간지, 주간지)들에 지원을 시작했다. 광주 지역 일간지는 『전남일보』와 『무등일보』, 『광주일보』가 선정됐다. 목포 지역 주간지는 『목포투데이』가 2015년까지 지원금을 받았으며 『목포시민신문』은 2008년, 2009년, 2015년 3년간 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목포 지역 신문 시장은 『목포투데이』와 『목포시민신문』으로 양립하는 양상을 가져왔다. 현재는 『목포신문』과 『목포타임즈』, 『전남중앙신문』 등이 발행되고 있다.

이 시기 목포 신문 시장의 두드러진 양상은 인터넷 신문과 일간 신문 기자의 급속한 수적 팽창이다. 인터넷 신문은 지면 신문에 비해 자유롭고 단순한 허가와 저비용의 뉴스 생산이란 장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양적 팽창을 하게 된다. 2016년 전남도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전남신문』을 비롯해 26곳에 달한다. 이들 인터넷 신문사는 각 지방에 주재기자까지 임명해 활동하면서 지역 내 기자들의 수적 팽창을 가져왔다. 지방 일간지의 수적 팽창은 목포에서 활동하는 주재기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민일보』, 『시대일보』 등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 일간지 20여 곳이 목포에까지 주재기자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들의 수적 증가가 지역 발전의 의제 설정 기능 등을 담보하는 담론을 양산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목포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사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속된 신문기자가 2016년에만 5명에 달했다. 과거 신문기자에 대한 관용적 자세를 보였던 사법당국이 적극적 처벌로 돌아선 것도 목포에 신문기자의 수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제2절 방송

목포의 방송 언론의 시기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KBS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목포방송소로 해방 전후 목포방송의 태동기이다(1940~1967). 두 번째 시기는 목포 민간방송의 시작과 성장기이다(1968~1995). 1968년 라디오 목포(RMB)가 전남 서남권 청취자를 대상으로 첫 라디오 전파를 쏘며 민간방송으로 출범했다. 라디오 목포는 이후 목포문화방송으로 사명이 변경돼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개편된 KBS 목포방송국과 함께 1990년대 중반의 민간 상업 방송 출현 전까지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며 목포의 방송 언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 번째 시기는 방송 경쟁시대 돌입과 경제 위기에 따른 지역 방송의 침체기이다(1996~2004). 1990년 SBS 민영방송의 출현으로 광주와 전남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광주방송(KBC)이 1995년 개국하고 공중파의 중계 방송에 그쳤던 유선방송 외에 전문 뉴스채널 YTN 등 전국적으로 50개가 넘는 지역 케이블TV 시대를 열게 된다. 이 시기 목포에는 기존의 호남방송과 케이블 TV 허가를 맡은 서남방송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특히 지역 방송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시련기를 맞았다. 네 번째 시기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등장과 보도와 드라마 기능을 추가한 종합편성채널 허가 등 다채널과 언론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지역 방송의 변환기이다(2005~2016년). 1999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등장했지만 그 역할과 시장의 영향은 미미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검색 기능이 강화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신문이나 방송시장을 압도하기 시작했으며 방송법 개정으로 2009년 jtbc를 비롯한 TV조선, 채널A, MBN 등 4개의 보도종합편성채널이 허가됨으로써 그동안 독과점적인 지상파의 보도 기능이 이전과 달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광고 시장이 인터넷 포털과 종편에 의해 분점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중앙의 지상파 방송과 달리 이렇다 할 지역 재원이 부족한 지역 방송에는 큰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인원 감소와 프로그램 제작 축소 등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목포KBS와 목포MBC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정규 직원들이 최대 100명을 웃돌았으나 2000년대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 말에는 1990년대 초반 방송 전성기 정규직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감소되고 그마저 외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목포의 방송 종사자들은 지역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의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산해 내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목포 지역 방송 환경이 미래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귀결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목포에서 방송이 처음 시작된 지는 75년 전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초창기의 방송은 시시비비를 가르고 공공기관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총독부의 지시나 주

민들이 지켜야 될 비상경제 상황과 목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동향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혼용 방송하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해방 이후 한국인에 의한 방송이 시작됐지만 방송은 여전히 신문의 그늘에 가려 언론의 역할보다는 음악이나 행사,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에 머물렀다. 사실 목포에서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언론 비판 기능보다는 음악이나 각종 행사 중계 등 프로그램의 홍보 전달이라는 이른바 스피커 방송이라는 안팎의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방송에 보도 기능이 강화되고 '라디오 오포대'나 '일등바위' 등 보도 가십 프로그램 등이 도입됐다. 특히 서울에서 공채 출신 기자들이 목포에 내려오면서 이른바 방송의 비판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1980년대 들어 경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컬러 TV가 보급되고 언론 기능도 듣는 보도에서 보는 보도로 바뀌면서 방송의 보도 기능도 한층 가속화된다. 1980년대 중반 목포에도 TV연주소가 설립돼 자체적인 뉴스나 편성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며 지역의 밀착성이 높아진 시기이다.

당시 목포에서 독과점을 누린 목포KBS와 목포MBC는 텔레비전 개국에 맞춰 신입사원 채용이 붐을 이루고 양사의 방송사 직원들이 각각 100명을 웃돌 정도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 방송은 중흥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경제위기 IMF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알리는 분기점이 된다. 이른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지역 방송사에도 감원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영방송과 케이블 TV가 속속 개국하면서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지상파 방송의 환경은 다채널 다변화 시대를 겪게 된다.

중앙에 정치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그나마 서울에 본거지를 둔 방송사들은 독과점적 경쟁력이 유지되는 반면 지역에 기반을 둔 방송사들은 해마다 운영난에 직면하면서 구조조정이 연례적으로 일상화되는 위기를 맞으면서 권역별 광역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5년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목포권에 이전하면서 도권 방송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기존의 방송 인력이 중점 투입됐으나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목포 지역 방송 언론 취재의 특성인 지역 밀착성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경영 어려움 속에서도 목포에 뿌리를 둔 방송 언론은 지역의 강점인 21세기 해양 수산 관광 자원의 보고인 '다도해의 특성과 장점'을 지역 의제로 삼아 이를 부각시키는데 끊임없이 힘을 쏟고 있다. 다채널 다변화 경쟁 속에서 자본의 경쟁력과 수익성 논리를 앞세운 방송사의 광역화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분권과 지역성으로 맞서는 지역 방송은 변곡점과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지역 방송이 어떻게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의제를 생산해내고, 지역민과 함께하고 변화해 가는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1. KBS 목포방송국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처음 시작된 해는 1927년이다. 1926년 10월 30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사단법인 경성방송국 설립을 위한 무선 전화 시설 허가를 얻어 1927년 2월 16일 호출부호 JODK(경성방송국), 출력 1KW로 시험 방송한 것이 시초였다.

목포방송은 1942년 11월 1일 조선방송협회 목포방송소가 설립돼 전파를 발사했다. 1927년 경성방송국이 일본어 방송을 주로 하고 1942년 3월 21일 광주방송소가 첫 전파를 발사한 뒤 7개월 이후의 일이었다. 신문과는 달리 방송은 광주가 더 빨랐다. 당시 목포방송소는 목포시와 인근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루 한 시간 정규 중앙방송 중계를 했다.

목포방송소가 개소되기 이전에는 목포라디오상당소가 1940년부터 목포시 무안동 6번지 한일은행 목포지점 옆 벽돌 2층 건물에 자리잡고 있었다. 청취료 징수와 청취 접수, 라디오 판매, 도청 적발 등을 맡고 있었으며 1942년 11월 2일 당시 남한에 있는 방송국으로 7번째인 목포방송소가 설치되면서 흡수되었다. 출력 50W, 호출부호 JBNK, 주파수 1080kHz로 첫 방송을 내보낸 목포방송소는 1945년 1월 방송국으로 승격됐다.

프로그램 대부분은 중앙방송의 중계였고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약간의 지방 소식과 공습경보 발령이나 해제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했다. 초대 방송국장은 이와바시 마모루[岩橋保]라는 일본인이었고 당시 목포 지역(제주도 포함) 라디오 보유 대수는 9백여 대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 1947년 목포방송국 신축 기성회를 구성했다. 지역 유지 등을 대상으로 650만 원을 모금했고 국고보조금 500만 원 등 1,150만 원을 들여 목포시 호남동 1번지 철도부지 878평을 매입해 1947년 11월 1일 석조단층 122평 건물을 완공해 이전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공보처 방송국으로 개편, 국영화됨으로써 오늘의 KBS가 되었다. 목포방송국도 1948년 공보처 목포방송국으로 됐고 호출부호도 JODK에서 HLKN으로 됐으며 6·25 전쟁이 발발하자 7월 26일 방송시설 등 기자재를 해군 함정 단양호로 옮겨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이동방송을 실시했고 인천상륙작전까지 참여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1950년 9월 28일 수복 후 호남동 1번지 방송국 청사를 접수해 호출 부호도 HLKA(서울중앙방송국)로 변경돼 중계하였다.

1973년 3월 1일 정부의 기구 개편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방송총국에 소속된 목포방송국으로 된 다음 1977년 3월 18일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116평에 131평의 송신소를 세웠다. 출력도 50KW로 증강하는 한편 주파수도 1470KHz로 변경했으나 1978년 11월 23일 다시 1467KHz로 변경했다.

1982년에는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억 1,151만 원을 들여 목포시 용당동 1188의 3번지에 대지 1,670평을 확보하고 거기에 15억 3,340만 원을 들여 1983년 11월 19일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 1984년 12월 22일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신청사를 준공했다. 그와 함께 연습소 장비, 공개 스튜디오, 승강장치 17개소, 조명기구 29대 등 기자재도 최신형으로 현대화했고 객석 260석의 다목적 공개홀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사에서 각종 전시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1985년 11월 15일에는 1,022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599평의 철근콘크리트 다목적 홀을 기공하여 1987년 4월 3일에 준공함으로써, 이곳에서 각종 공개 행사와 체육 행사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다목적 홀을 신축하면서 대지 구입비 2억 3천만 원은 보해양조의 임광행 회장 등 8명이 낸 발전 자금으로 충당했다.

1987년 11월 24일 목포방송국 TV, 제1TV, 제2TV, 교육TV 매체별 공히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신안군을 가시청권역으로 하고 있다. 목포 지역 방송의 전성기였던 1991년에 71명의 정규 직원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65명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운전직과 정문 청경직 등이 모두 외주 용역화 되고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2016년 말 현재 방송 정규직은 41명이다.

2016년 말 현재 목포방송국 제1TV 프로그램으로 뉴스 보도는 저녁 뉴스 7과 뉴스 9 등 하루 두 차례 목포·전남권 뉴스 형태로 보내고 있으며 아침과 주말 뉴스는 KBS 광주방송총국이 통합 운영하고 있다. 제1라디오 목포·전남권 뉴스로 9시 뉴스, 정오 종합 뉴스,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6시 등 하루 5차례에 걸쳐 5분 자체 뉴스를 송출하고 있다.

또 제1라디오 제작 프로그램으로 매일 아침 「출발! 서해안 시대」를 비롯해 라디오 상담실, 라디오 매거진을 자체 제작해 송출하고 있다. KBS 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 시대」는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58분까지 진행되는 종합 시사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2년 첫 방송을 시작해 15년 동안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다루며 지역을 대표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인 목포문화방송이 2001년까지 아침 「라디오 푸른 신호등」과 함께 30년 가까이 진행해 온 보도 가십 프로그램인 「라디오 일등바위」(「오포대」(1968~1972년)를 이어받아 1973~2001년 방송)가 폐지되면서 「출발! 서해안 시대」는 2016년 말 현재 유일하게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의 현안 소식 등을 다루고 있는 최장수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되었다.

적은 방송 인력으로도 지역 밀착형 다큐멘터리 제작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6년 9월 방송된 「심층 보고 '천일엽의 재발견」은 광물이던 천일엽이 식염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어서 2007년 「도시와 농촌을 살리다. 로컬푸드」, 2008년 「산업적 농업의 재앙! 자연과 타협하기」, 2009년 「밥상 위의 혁명-슬로푸드-」, 2015년 「섬, 항일의 등대」 등이 방송됐다.

2. 목포문화방송

주식회사 목포문화방송은 목포시 북만동 2번지(구 조흥은행 앞 용빌딩) 개인 소유 3층 건물 60평을 임대해 주조정실로 꾸미고 1968년 8월17일 라디오 목포(RMB)가 개국돼 첫 전파를 발사하면서 시작됐다. 호출 부호는 HLAM 주파수는 1390kHz로 관할 청취구역은 목포를 비롯해 영광과 함평, 무안, 신안, 해남, 영암, 강진, 장흥, 진도, 완도 등 1개 시 10개 군이었다. 초대 사장은 정중섭이다.

라디오 목포는 (주)문화방송과 가맹체제로 운영되다 1971년 문화방송 계열사인 목포문화방송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자유와 책임, 품격, 단합'을 사시로 정했다. 라디오 목포 지분을 인수한 권이담이 제2대 사장으로 취임하고 AM 주파수도 1390에서 1386kHz로 변경됐다. 유달산 사옥은 1969년 9월 대의동 2가 1번지 대지 200평을 목포시에서 분할 받아 1969년 5월 10일 반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63평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완공돼 1989년 용당동 신사옥 이전까지 18년 동안 음악 FM과 TV 개국으로 3개의 매체를 거느린 종합방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앙 방송사들의 5·18 왜곡 보도를 규탄하는 시민시위대가 유달산에 있는 목포MBC를 진입해서 점거한 까닭에 5월 21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1986년 7월1일 FM방송(호출번호 HLAM-FM, 주파수 102.3MHz, 출력 1kW)이 개국되고 1987년 11월 16일에는 TV 방송(VHF7, 출력 1 kW)이 개국되면서 본격적인 TV 시대를 열었다.

1988년 1월 목포문화방송은 문화방송 전국 18개 계열사 가운데 두 번째로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1988년 9월 15일 지금의 용당동 신사옥이 완공돼 18년 유달산 시대를 접고 1989년 3월 3일 용당동 사옥으로 이전했다. 1988년 타계한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건축가 김중업의 생전 마지막 작품으로 용당동 사옥 건물을 1984년 설계했다. 용당동 신 사옥은 2,20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500평의 비취색 건물로 지어져 첨단 방송시설을 갖춘 종합방송센터로서 지역 문화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1999년 10월에는 표준FM(89.1MHz, 출력 2kW) 방송이 개국됐다. 2005년 4월 디지털 TV 방송을 개국하여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아날로그 TV 방송을 완전히 종료함에 따라 디지털 TV 방송시대를 열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 방송 언론의 통폐합과 중앙 집권화가 대두되면서 1971년 이후 목포문화방송의 대주주로 대표이사를 맡아왔던 권이담 사장은 신군부 정권의 강압에 못 이겨 대주주 지분 51%를 문화방송 경향신문에 매각하게 됐다. 51% 대주주 지분을 획득해 본사 기능을 차지한 서울문화방송은 1989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서울MBC 출신 남궁용문을 제12대 목포문화방송 사장으로

선임했다. 대신 권이담 전 대표이사는 비상임 감사직을 수행했다. 1990년 남궁 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면서 권이담 감사가 제13대 목포문화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1993년 서울MBC 출신 임동훈이 3년 임기의 제14대 목포문화방송으로 선임되면서부터 2016년 12월 현재까지 서울MBC 출신들이 3년 임기의 대표이사직에 계속 선임됐다. 몇 차례 목포MBC 자사 출신 임직원들이 대표이사나 상무 등에 도전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목포문화방송을 설립했던 권이담 사장 이후 2016년 말 현재까지 목포MBC 자사 출신 사장은 단 한 차례도 배출되지 못했다.

목포MBC는 1987년 TV방송 개국에 맞춰 1986년과 1987년, 1988년에 무려 50명이 넘는 기자와 PD, 아나운서 엔지니어 등 방송과 기술 신규 인력을 공채로 선발하는 비약적인 사세 확장 추세를 보였다. 1996년 재직 인원이 119명을 최고로 정점에 달했으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겪고 지역 방송사 경영난과 무인 방송시설 도입 등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절반 가까운 정규 직원이 퇴직 또는 명예 퇴직하는 등 혹독한 감원 바람이 불었다. 시설 관리와 경비, 운전 업무 등이 외주로 속속 전환되면서 2016년 말 현재 전체 직원 106명 가운데 대표이사와 상무 등 임원 2명을 포함한 정규직은 52명이다.

목포문화방송은 사세가 상승국면에 있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기간에는 이렇다 할 문화행사가 없던 목포권에 난영가요제를 비롯해 MBC 마당놀이와 국악, 가곡 등 장르를 넘나들면서 각종 문화 행사를 유치해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켰다. 특히 '영산강을 살리자'는 지역 밀착형 답사 행사와 취재 보도 그리고 심층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문제와 다양한 특성을 전국에 알리는 지역의 중요한 방송 역할을 해왔다. 2000년대 들어 시민단체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고 각종 매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선보임에 따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대외적인 MBC 행사는 상당부분 축소됐다.

2000년대 이후 경영난 타개를 위한 광주·목포·여수MBC 광역화 논의가 부분적으로 진행돼 오다 2014년 1월 김성수 목포MBC 사장의 전격 제의에 따라 3사 경영진이 동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영진은 공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는 공익성이나 지역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 계획도 없이 대주주인 서울MBC가 광주·목포·여수 각 사에 300억 원이 넘는 자체 유보금으로 지역사의 주식을 인수 소각해 합병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목포·여수MBC 3사는 2014년 7월부터 주말 「뉴스데스크」를 각사 순회 방식으로 통합 운영해오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목포문화방송의 TV 편성 프로그램으로는 주간 아침 정규 프로그램으로 「생방송 전국시대」를 비롯해 주말 「어영차 바다야」, 주간 보도토론과 대담 「일요포커스」가 방송되고 있다. TV 뉴스 보도는 아침 「목포MBC 뉴스투데이」와 「생활뉴스」, 「저녁뉴스」, 그리고 「뉴스데스크」 등

하루 4차례 목포·전남권 뉴스 형태로 보내고 있으며 주말 「뉴스데스크」는 2014년 7월부터 광주·목포·여수MBC가 정기적으로 뉴스 진행자를 바뀌가며 통합 운영하고 있다. 라디오 뉴스는 목포·전남권 뉴스로 오전 7시, 정오, 오후 3시, 저녁 7시 등 하루 4차례에 걸쳐 5분에서 10분 자체 뉴스를 송출하고 있다.

목포문화방송은 특히 지역 방송사 여건으로서는 제작하기 힘든 장기 대형 주간 제작물과 지역 문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보도와 탐사 제작 프로그램이 잇따랐다. 「힘내라 한국농업」은 2007년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의 대안을 찾기 위해 시작된 주간 정규 방송물로 60부작으로 제작돼 국내외를 넘나들며 국제 농업의 흐름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 「어영차 바다야」는 2011년부터 방영된 주간 제작물인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해양수산 문화를 미래유망 산업으로 조명하면서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 방송에서는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급 제작물로 수산식품 분야,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 해외로까지 취재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05년 피디와 기자가 참여해 다도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한 특별기획 「섬」 3부작은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방송대상과 한국기자상 등 9개 부문의 상을 받기도 했다. 3년여에 걸친 기획과 취재를 거쳐 방송된 「섬」은 소외된 바다 시장을 재조명한 제1부 「파도위의 난장 파시」, 제2부 「독거도의 홀로 아리랑」, 제3부 「떠도는 섬」을 통해 한국 섬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창사 40주년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된 「지방」 3부작은 1부 「떠나는 지방, 남겨진 고민」, 2부 「사람만이 희망이다」, 3부 「지방을 말한다」로 구성돼 지방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의 정체성과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5년 라디오 특별기획 「다도해 상상 열전,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는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다도해의 독특한 지역 전설과 설화를 발굴해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라디오 제작물도 잇따라 선보였다.

목포문화방송은 특히 2016년 창사특집 「섬의 날을 제정하자」라는 지역 의제 토론회를 주관했고, 이 주제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건의했다. 국회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섬의 날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의 태동: 서남방송에서 CJ헬로비전 호남방송(1995~2016)

목포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은 서남방송에서 시작돼 호남방송으로 이어졌으며 지금의 CJ헬로비전 호남방송으로까지 수차례 인수 합병 과정을 거쳤다. 주식회사 서남방송(ATV)은 1995년 3월 8일 보

해양조 주식회사 계열회사로 첫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목포 케이블TV 방송 시대를 열었다. 최초 방송 구역은 목포, 무안, 신안이었지만 1997년 2월 15일 해남과 진도, 완도, 영암, 장흥으로 시청권역이 확대됐다.

그러나 IMF 한파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00년 서남방송은 보해양조에서 동양그룹 계열의 온미디어에 인수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기존 종합유선 방송인 호남방송과 가입자 유치 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구도에 돌입하면서 적자 경영이 지속되었다. 결국 유선방송부터 시작해 목포에 뿌리를 둔 호남방송이 2006년 온미디어가 지배 주주로 있는 서남방송을 흡수 합병해 2008년 (주)한국케이블TV 호남방송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경영안정을 꾀하게 된다.

이어 대기업 CJ그룹의 계열회사인 CJ헬로비전이 지역 가시청 케이블TV 인수 확장 정책에 따라 호남방송을 인수하면서 2013년 CJ헬로비전 호남방송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과 헬로비전 전국 계열사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4. 광주방송(kbc) 전남서부 방송본부

광주방송(kbc)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가시청 권역으로 하는 민영방송으로 1995년 5월 개국하였다. 본사는 광주에 있고 1998년 7월 전남서부방송본부를 목포에 개소하였다. 본부장을 포함해 5명의 기자가 상주하며 전남 서부권역을 대상으로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스나 각종 프로그램은 서부방송본부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광주 본사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5. 목포극동방송(FEBC)

목포극동방송은 라디오 복음 선교 방송으로 1973년 6월 30일부터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동북아시아 가청인구 17억 명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방송 최대출력인 250KW, 주파수 1566kHz로 기독교 선교 방송을 활발히 해 온 아세아방송 호남본부의 후신이다.

아세아방송 호남본부는 아세아방송 제주본부에서 송출되는 한국어 방송에 대한 반응이나 음악 신청, 상담 신청이 호남 지역에서 70% 이상 많아 목포와 목포 서남 지역의 청취자 뜻을 적극 반영할 목적으로 1994년 11월 14일 목포에 개설되었다. 그 후 1995년 4월 10일 아세아방송 봄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전용회선으로 제주본부와 연결하여 하루 2시간 30분씩 방송을 송출하였으며 차츰 방송 시간을 확대하였다.

당시 호남, 특히 목포권은 산업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소외로 낙후를 면치 못해 소

외감이 주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같은 형편 속에 있는 목포, 호남 지역에 기독교 선교 방송 기구로 아세아방송 호남본부가 설립된 것은 획기적인 일로 여겨졌다. 더욱이 목포 지역은 1897년 목포 개항이 되던 해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가 설립되어 호남 지역 기독교 선교 시작의 상징적인 지역이자 장자교회가 있는 곳으로 자부심이 이어져 왔는데, 지역 기독교계가 크게 환영하였다.

그 뒤 아세아방송 호남본부는 주파수 100.5MHz로 FM 방송을 허가받아 2001년 4월 2일 목포극동방송으로 개명, 개국하여 목포 일원과 무안, 나주, 신안, 영암, 해남, 진도, 함평, 장흥, 강진, 영광 일부 등 가청 인구 6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설교와 간증, 찬양을 송출하고 있다.

목포극동방송은 개국 시부터 호남 지역 공중파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아나듀오'(작가와 아나운서, 프로듀서, 엔지니어를 겸하는 1인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인 3역, 4역의 역할로 방송 제작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소수 핵심 인원으로 방송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방송사의 재원은 상업광고 수입이 아닌 방송 청취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취자 중 종일 고정 청취자가 많아 매체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 제작 비율을 뜻하는 로컬 제작율이 70%에 이르기 때문에 지역의 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며 지역민들의 참여와 후원이 활발하여 타 방송사와 차별되고 있다.

목포극동방송을 돕기 위한 조직으로 1994년 5월 10일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방송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목포와 해남, 진도, 완도, 강진, 장흥 등 6개 지역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무안과 영암 지역에도 운영위원회 창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방송사 협력 기관으로 목회자 자문위원회, 에스더사모회, 중보기도회, 전속어린이합창단, 전속여성합창단, 시청자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방송사를 돕고 있다.

특히 1997년 단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비 운영방식으로 창단된 전속 어린이합창단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갖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2001년 창단된 전속 여성합창단도 각종 초청연주와 정기연주회, 해외연주회 등을 통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민간 외교 사절로 목포극동방송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목포극동방송은 지난 23년 동안 공중파 기독교 라디오 방송사로서 목포와 서남지역 1,000여 개 교회와 청취자 성도들의 기독교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목포극동방송은 방송 선교를 통한 지역 복음화에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주역을 담당하도록 방송을 운영해 나가며, 홍보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목포에서 운영되는 종교 방송은 2006년 텔레비전 방송으로 개국한 기독교TV(CTS) 목포방송이 있으며 CBS기독교 광주방송 목포서부지사가 진출해 있다. CBS기독교 광주방송은 1961년 광

주에 개국했으며 1980년 11월 언론 통폐합으로 뉴스와 광고가 강제로 중단되기도 했다. 1987년 뉴스 보도 기능이 부활되고 협찬 광고가 허용됐다. 기독교 광주방송은 2010년 1월 목포서부지사를 개소하고 별도의 기자는 상주하지 않고 파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6. 신안교육방송국

신안교육방송은 목포는 물론 도서 지방 교육방송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다. 신안교육방송은 제4공화국 수립 이후 국회에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당시 박월신 신안교육장이 관내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들어 낙도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1974년 9월 27일 오전 11시 개국하게 되었다.

이날 첫 전파를 발사한 신안교육방송은 관내 초등학교 본교 61개교, 분교 44개교, 중학교 13개교 등 모두 118개 초·중학교에 고정 수신국을 두고 출력 300W, 주파수 FM 32.6 MHz로 목포시 중동 2-6번지에 방송 본국을 두었으며 목포시 용해동 양율산 34-3번지에 송신소를 두어 학습방법 훈련을 위한 방송교재를 개발, 방송했다.

당시 신안교육방송국의 운영지표는 ① 교육 행정의 능률화로 학교차 해소, ② 어린이의 경험권 확대로 학력 차이 해소, ③ 문화 수용력의 확대로 복지 교육에 기여, ④ 교사의 질적 향상으로 새 교사 상 정립에 두었다. 방송 내용은 2000년대의 고도 산업사회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교육력 향상을 과제로 한 학습과 학습 보조, 장학 연수, 행정 지시 등 하루 평균 5시간 50분, 주간 평균 30여 시간씩 방송했다. 학습 보조 방송도 연평균 260편을 자체 편집했다. 방송 매체 가운데 30%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활용했고 자체 제작 비율은 63% 정도였다.

신안교육방송은 특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흥미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통한 정보 처리능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고 낙도 섬지역 근무 교사들의 질적 향상과 사기를 높이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 또 낙도의 특수성에 따른 해안 지역의 대공 보안, 해양탐구, 낙도 개발, 그리고 다도해 관광 개발 등 향토에 관련 있는 학습 지도와 주체적인 학습 방법 훈련을 위한 방송교재를 개발해 학력 신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낙도 교육에 크게 공헌한 신안교육방송은 공영방송의 교육방송 실시와 라디오 TV의 난시청 지역 해소, 도서 지역의 전화 사업 확충 등으로 섬 지방에 국한된 특수방송이 필요 없게 되면서 1985년 12월 30일을 기해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